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송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능멸당한 국회와 국정감사, 법치민주주의 실종

-- 국회(20-3)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C** 학점 --

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는 여당의 정부 감싸기(국회법 114의 2 참조)와 야당의 전투력(준비/열정) 부족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국정감사!

◆ **시정조치 실명제와 철저한 점검으로 실효적 국정감사가 되어야**

② 국정감사가 갈수록, 형식적 일과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국감일수는 줄고 피감기관은 2배 증가

◆ 피감기관 아닌 기업/민간인 증인은 대폭 늘었다(116명에서 173명으로)

③ 회의록도 없는 **배경사진** 뿐인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때우기** - 빈축

◆ 시찰은 평시에 하라는데, 오히려 현장시찰 횟수가 5회 늘어났다.

④ 20년 전에는 하루에 평균 2개 기관<피감기관>으로 감사하였는데,

◆ 올해(20-3)는 무려 평균 5.56개 기관(외교통일위 제외)을 하루에 감사

⑤ 1999년에는 하루에 8개 기관 이상 국정감사는 정무위 밖에 없었으나,

◆ 2018년엔 피감기관의 50%가 하루 10여개 기관 무더기 수감

◆ 국정감사에 불러놓고 질의 한번 없었던 경우 120개 기관

⑥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3대 이슈

◆ 청년실업자를 허탈케 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 지적

◆ 사립유치원 비리 등 정부 지원금 관리의 난맥상 질타

◆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정책** 점검 등

국정감사(20-3) 평가회 겸 국리민복상 시상식 : 2018. 12. 27.(목) 18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20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1년째 국정감사인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면에서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인 국정감사였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C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을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 정권 심판’ 등을 내세웠으나, 피감기관장의 허위달변 등에 사실상 무방책이어서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바른 국감’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나, 노회찬 의원 사망이후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평

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은 거대한 흐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2) 게다가 피감기관이 과다해서 지난해 국정감사(701개) 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의 753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으면서도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만 국감을 하면서도 밤샘 국감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현장시찰과 기업인/민간인 증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태부족한 시간을 감정싸움하듯 의사진행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국회는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자료가 국감부활 31년 동안 전무하여 과연 국정감사 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필요한 지와 성과를 알 수 없음》

- (3)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국회는 시정조치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봉어빵 국감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할 것임)
- (4) 여·야 정책, 이념문제가 아닌, 국가(정부)의 존재이유, 정의와 양심의 문제로서. **서울시의 일자리 나눠먹기 의혹에 분노**하고, ①**행안위의 경찰청, 서울시경 국감**에서 동영상이 방영되며 탄핵반대 집회장소에서 4명의 시민이 죽고 72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종결을 했다는 경찰의 답변/ ②**과방위의 KBS 국감**에서 직원의 60%가 역대연봉인데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 없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허용 요구, 보복성 인사, 왜곡 편파방송을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 ③**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못살겠다면서 시위를 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음에도 발뺌을 하거나/ ④**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회피/ ⑤ **대법원 국감**에서는 잘못된 기소로 5년째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4년째 연속 지적을 받았으나 잘못된 재판인줄 알면서도 법과 원칙, 절차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마치 개별 재판 관여처럼 묵살하며 ‘답변할수 없다’ 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능멸하는 것이고 법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총평은 10쪽 이하 참조》
- (5)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12. 7. 기준 38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판문점’ 선언이 거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지키는 데 주력했으며, 한국당은 정권 1년 5개월 만에 신(新)적폐가 쌓였다고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12. 7. 기준 38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유치원 비리’ 거론됨)을,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12. 7. 기준 30개 국정감사회의록에서 ‘채용비리’ 거론됨)을 제기하며 양당이 이슈제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5.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2018년도 평가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하고, 여야를 넘어 지적되는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면 바꾼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매년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 국정감사(20-3)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민복합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상명변경의 배경과 취지 :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0년 전부터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포지티브 의정감시활동의 ‘상징’으로 되어 왔으나, 근년 유권자들을 혼동/기망하는 똑같은 명칭(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짝퉁상이 범람하여 부득불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상명을 국회의정활동,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365일 상기하자는 의미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시행하는 것임.

- (1) 《모니터단의 활동근거》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명)은 헌법(제1·21조)상의 국민주권과 알권리, 국회법(제7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의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1천명의 모니터들이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국회의 공식지원<매년 5억원씩>제안까지 사양하면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신뢰와 명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를 정착시켰다. 《2018년도에 국정감사 감사반장인 상임위원장이 대부분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직접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들의 참관사실을 말하며, 수감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국감말미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리다고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에게 환기하였음.》
- (2) 《모니터단의 그간업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네가티브운동으로 국회를 폄훼할 때 ① 포지티브 운동으로 국회 4대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②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으로 국가5부를 건전케 유도하고, ③ 민주국가의 상징인 국회를 시민·대학생들이 감시함으로써 주권자로서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였으며, ④ 국감제도 관행 개선노력을 하였고, 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개최 근절, ⑥ 국정감사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으로 국민 알권리 제고, ⑦ 국정감사의 과잉영접 등 수감질서 개선, ⑧ 국감의 제도, 내용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감시 우수모델로 외국학자들에게까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3) 《모니터단의 조직구성》 모니터단은 전국규모의 지부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통칭으로 270개 NGO연대기구라고 하고 있다. 모니터 장소가 협소하여 현장 모니터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실제 1천명 이상의 모니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 인원 및 배치와 공문발송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총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정감사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보았다면 그 같은 오해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정감사

가 16개 상임위원회(17개 상임위 중 정보위 제외)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가 나서서 홀로 모니터링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기관조차 그러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간사단체를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수년째 계속 간사단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감모니터단의 간사단체라고 해서 국가예산지원이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다.

- (4) **《모니터단의 평가기준》** 국정감사 평가기준 중 2일 이상(오전 오후로 나누어 4회이상) 결석한 의원은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0년 동안 모니터단의 각종 발간자료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니터위원 교육을 통하여 안내·공개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회 보좌진 국회출입기자 전문가 등과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준에 따라 여야, 친소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평가과정과 기준**》 모니터관찰사항에 나온 대로 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참신성 등에 의한 현장, 화상모니터위원들의 다양한 추천과 지적이유를 종합하고, 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방문과 공식, 비공식의 전문가의견조회 및 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까지 제출요청된 국회의원실의 자평 및 추천 내역과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정량평가로 국정감사 기간동안만을 대상으로, 국회공보를 통한 공식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국회 인터넷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질의횟수(단순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은 제외하고 증인신문질의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만 합산함) 및 질의시간을 정량화 하였으며, 언론보도된 종합인용빈도수와 국정감사도중 자리를 뜬 이석시간은 모니터위원들의 제출자료를 통해 종합하였다.

정성평가로 정치적 논란이 심한 경우(예컨대,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비준문제 등)에는 역지사지하였으며,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인 제도미비 발견(입법개선사항), 국정난맥상이나 부정부패 질타, 예산낭비 지적 등이 대상이고 지난해 시정조치사항 점검도 반영했다. **《그동안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신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하면 모니터단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모니터단을 모함하거나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며 모니터단의 선정을 인정하게 되었음》**

- (5) **《선정 우수의원의 수》** 전체 감사위원 중 상임위별로 25% 전후해서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하는 것은 고민 끝에 결정된 합리적인 수치이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처음엔 적은 수를 선발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소수를 선발하는 일이 훨씬 용이함). 그러나 전체의원 중 소수만을 선정하여 시상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원들이 상을 미리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감사위원들간 경쟁을 높여 결과적으로 좀 더 나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연구하여 25%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0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석곡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문서번호 : 국감 2018-38-2 <표지포함 1 매>

2018. 12. 14.

수 신 :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국회의원)님

참 조 : 보좌관님 / 비서관님

제 목 : 짝퉁 상의 심각성을 알려드리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명칭변경 안내말씀

— 짝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수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바, 우리 모니터단은 2가지 난처한 입장입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방어적 입장이며, 둘째는 20년간 의정감시 노하우로 worst를 best라고 하는 부정불의를 알면서도 방관해야 할지의 입장입니다 —

1. <입법 감시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진보/보수, 여/야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중립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포지티브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네가티브 일색이었던 제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침부터 심야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밀착 모니터링하고, 최초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제정하여 20년 동안 평가/시상해 왔으며, 1)국정감사모니터위원 모집/교육 등의 준비부터, 2)제주도 등 전국의 국감현장 모니터링과, 3)정밀평가와 시상식까지, 4)매년 3~4개월 동안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짝퉁상 범람>; 그런데 근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 우후죽순처럼 범람하기 시작하여 엉터리 “짝퉁 우수의원상”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함으로, 우리 모니터단은 우수의원 선정에 있어 이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11월 23일 공개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그후 짝퉁 상 수상 홍보가 현저히 줄어 들었으나, 아직도 몇몇 의원실에서 짝퉁 상 감점<비슷한 경우엔 선정에서 탈락>취지와 배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 몇 말씀드립니다.

2.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짝퉁 상을 수상하거나 홍보하는 의원을 감점하려는 3가지 정당한 이유들.

(1)<똑같은 명칭>; 지난 20년간 써오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똑같은<짝퉁>명칭사용은 “유권자 기망” “국정감사우수의원상”은 본 모니터단이 제정하여 시행해오던 상으로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한 의원을 격려하는 상이었는데, 이 상이 국회의 노벨상이라는 신뢰와 권위가 따르자, 동일한 명칭<우수의원상>의 ‘짝퉁상’들이 등장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동<시상주체/기준 등 구별이 안됨>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 기망입니다.

(2)<가짜 우수상>; 꼴짜 의원도 우수의원으로 시상하는 짝퉁 상 병폐는 결국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행태.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영역에 있는 위원회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몰아 선정하거나, 국정감사 중 8일이나 결석한 꼴짜 의원에게 최우수 의원상을 주거나, 국감을 공개를 하지도 않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 상을 시상하는 엉터리 짝퉁 상들의 행태는 언론과 유권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3)<다목적 감점>; 우수상 선정에서 감점하는 것이 상의 제정취지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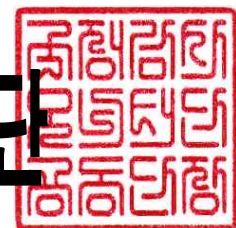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백미로서 주요 당직자까지도 대부분 감사장에서 적극적인 준비로 정책질의를 하므로 우월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25%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원칙 때문에 열심히 했더라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수가 많으므로, 짝퉁상이라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면 <비슷한 성적의 수상못한 의원이 수상할 수 있도록> 감점하여 이중수상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형평성 측면 등>는 의견들입니다.

3. <명칭을 변경>; 이에, 우리 모니터단은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공개적으로 감점 기준을 안내해 드렸아오니. 혹여라도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짝퉁 상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간 써오던 ‘국감우수의원상’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려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8년도 공동 단장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전화 02-523-8760~7)



20년간 인상깊었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베스트 10

지난 15대 이후 20년 동안 국정감사를 모니터 해 온 모니터들이 선정한,

-- 20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 10결(무순) --

국회의원 재직기간 중 한 번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놓치지 않고 수상했던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

정당 대변인 시절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우수 상임위원장상을 거머쥐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모범과 성실 그 자체로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모범의원에 계속 선정된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2000년 제16대 국회 초선·재선 바람을 일으키며 우수의원상을 잃지 않았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민주당),

국정감사장을 긴장케 하는 이슈 메이커이면서 대표시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는 **박지원** 전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시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놓지 않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나운서 출신으로 늘 국정감사장을 긴장케 했던 **박찬숙** 전 의원,
풍부한 정치경륜과 현장감있는 정책질의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면서
감사장을 긴장시켰던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서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인기를 모았던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법사위의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
과학기술정보위원회와 재경위원 등을 지내면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웃음의 신사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방위원회를 처음으로 개방해 알권리를 보장한 국방위원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전의원도 기억에 남는 의원으로 많이 거명되었다.

2018년도 국정감사(20-3) 국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국민복상(모범의원) (국회직, 대선 순)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방위, 자유한국당)	박지원 의원(법제사법위, 민주평화당)
최연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 상임위원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주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평화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당)

■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 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순》 ()안 당적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정(정의당) 애(대한애국당) 무(무소속)
국 회 운 영	김병욱(민) 박경미(민) 성일종(한) 윤재옥(한)
법 제 사 법	김도읍(한) 박주민(민) 장제원(한) 표창원(민)
정 무	고용진(민) 김선동(한) 김종석(한) 이태규(바) 전해철(민) 정태욱(무)
기 획 재 정	김성식(바) 나경원(한) 박영선(민) 심상정(정) 심재철(한) 유승희(민) 추경호(한)
교 육	김한표(한) 박용진(민) 전희경(한) 조승래(민)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김성수(민) 박대출(한) 박선숙(바) 박성중(한) 변재일(민) 윤상직(한)
외 교 통 일	심재권(민) 유기준(한) 이인영(민) 이정현(무)
국 방	민홍철(민) 백승주(한) 이종명(한) 하태경(바)
행 정 안 전	권미혁(민) 송언석(한) 유민봉(한) 정인화(평) 조원진(애) 홍익표(민)
문 화 체 육 관 광	박인숙(한) 손혜원(민) 우상호(민) 이동섭(바)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김정재(한) 김현권(민) 박완주(민) 이만희(한) 이양수(한) 정운천(바)
산 업 통 상 자 중 소 벤 처 기 업	곽대훈(한) 권철승(민) 김삼화(바) 백재현(민) 위성곤(민) 윤한홍(한) 정유섭(한)
보 건 복 지	기동민(민) 김상희(민) 김순례(한) 김승희(한) 장정숙(바)
환 경 노 동	김동철(바) 신창현(민) 임이자(한) 한정애(민)
국 토 교 통	김상훈(한) 박완수(한) 박홍근(민) 윤관석(민) 이현재(한) 이해훈(바) 정동영(평)
여 성 가 족	송기현(민) 송희경(한) 신경민(민)
비 고	정당별 분석 <국감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국무의원 7명 제외 122명 중 32명, 자유한국당 112명 중 33명 바른미래당 30명 중 10명, 평화당 14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1명 무소속 6명 중 2명, 애국당 1명

2018년도 국정감사(20-3)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① 교섭단체별 (2018. 10. 국감당시 기준)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
선정의원(명)	33	37	10	8
전체의원(명)	122	112	30	27
선정비율(%)	27.05%	33.04%	33.33%	29.63%
검임상임위포함(명)	141	129	35	31
선정비율(%)	23.40%	28.68%	28.57%	25.81%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7명을 제외한 수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5	21	13	7	2
전체의원(명)	137	66	46	34	15
선정비율(%)	32.85%	31.82%	28.26%	20.59%	13.33%

※ 문희상 국회의장(6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0	21	42.0%

※ 감사위원 298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6.77%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8	70
전체의원(명)	47	251
선정비율(%)	38.30%	27.89%

※ 지역구 의원 252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9	20	40.82%	강원도	8	2	25.00%
부산광역시	18	5	27.78%	충청북도	8	1	12.50%
대구광역시	12	6	50.00%	충청남도	11	3	27.27%
인천광역시	13	2	15.38%	전라북도	10	2	20.00%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0	4	40.00%
대전광역시	7	1	14.29%	경상북도	13	4	30.77%
울산광역시	6	0	0.00%	경상남도	15	6	40.00%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9	12	20.34%	계	251	70	27.89%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경기도는 60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1명 제외

2018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목차 ■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3
■ 지난 20년간 인기있었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베스트 10	6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7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복상 주요 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8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시상식 총괄	9
● 평가회 및 시상식 개요	9
● 2018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0
1. 2018년도 국정감사의 최종성적은 C 학점	11
2. 2018년도에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성과	13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14
4.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14
5. 정부는 지적을 받지만 정책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16
6. 증인 등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지연 등 방해도 많아	16
7.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17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17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18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19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19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20
●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20
2.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25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	34
II. 시정조치 점검으로 ‘붕어빵’ 국정감사 종식	45
(정권에게도 독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여야가 협력해 척결해야)	45
III. 20년전 국감과 비교해 보니,	54
IV. 화제(話題)로 본 2018년도 국정감사	60
V.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감 진행상의 특징	72
VI.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전반(全般)	84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시상식 총괄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의 공동단장)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20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3~5명씩 연인원 1,000여명(온·오프라인)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고 온라인으로 모니터를 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였고, 298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0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6시,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2018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2018년도 국정감사의 최종성적은 C 학점

정권교체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는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전투력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국정감사

국회의 헌법상 권한(헌법 제61조)이요,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인,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인 국정감사 였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C학점 국정감사였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해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5천만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정책·민생 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

‘C-’ 보다 조금 상향해 금년(20-3) 최종평가는 ‘C’ 학점으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평가점으로는 지난해보다 파행(횡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등 국감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아졌으며, 국감 초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점검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점으로 피감기관의 거짓 우롱답변에도 야당은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여당은 부실 정부를 감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여 국정감사의 기능을 퇴보시킨 점이다. 또한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늘어났으며, 수감기관 또한 지난해 701개보다 늘어난 753개여서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였다.

2. 2018년도에 눈에 띄는 국정감사 쟁점과 성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12. 7. 기준 38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판문점’선언이 거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지키는 데 주력했으며, 한국당은 정권 1년 5개월 만에 신(新)적폐가 쌓였다고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 애썼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12. 7. 기준 38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유치원 비리’ 거론됨)을,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12. 7. 기준 30개 국정감사회의록에서 ‘채용비리’ 거론됨)을 제기하며 양당이 이슈파이팅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이 빚어 졌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10월 22일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태양광 발전산업 ‘밀어주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치원 문제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10월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초반부터 파행이 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을 관통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국회 동의 없는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주 강정마을사태,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문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감에서는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시킨 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간 공방이 계속 되기도 하였다.

외교통일위(위원장 강석호) 국감에서는 첫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국감 정국을 달군 소재였고, 판문점 선언 비준, 통일정책의 투명성, 한미우호관계와 북미관계 조명 등이 단골메뉴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가역적인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GP 철수에 따른 안보공백을 우려하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이슈화 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잇따른 화재사고 관련 대책과 소방관 안전,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쟁점이 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나 고용세습 문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와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에서는 탈원전, 통신정책과 가짜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는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정책, 연금정책, 복지정책의 난맥상 등이 주요 이슈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눈에 띄어 소상공인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겸임위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해숙)에서는 여성 성폭력 대책, 저출산과 보육대책 등이 크게 조명되었다.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국회는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역대 가장 많은 피감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작년보다 50여개가 증가한 753개 기관이며 현장시찰도 23회(24회 계획)나 실시했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호통과 욕박지르기, 자리뜨기, 상대방 의원에게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 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이 국정감사 때 금년에 지적된 것이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고 새로운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래 계신 위원님들 얘기를 쪽 들어 보면 레퍼토리가 그냥 단골메뉴라는 거예요. 매일 지적되고 다음에 보완하고 검토한다 그러고 또 지적되고 그래서 6년,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그래프를 즉 검토해 가지고 해마다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하고, 지적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우롱하는 작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2018년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같이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섯 다운(Shut Down)까지 할 수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이 아닌 ‘질타’, ‘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4.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국민의 대표인지, 정당하수인인지? 위험한 행태 만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5개월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배했다.

정당의 자체 평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 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평가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였다”고 평했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 못하였다면서도 개별 의원의 충실한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 지난해까지만 해도 야당역할(정권이 바뀌었으나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을 하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라는 국감 기조 아래

민생·개혁정당의 이미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끄러울 정도로 노골적인 정부 감싸기가 도가 지나쳐 야당위원의 질의에 끼어들어 감사방해를 함은 물론, 자신의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기까지 하여 눈총을 사기도 하였다.

(2)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 ‘고용쇼크’ , ‘인사 참사’ , ‘부동산 가격 폭등’ , ‘높은 실업률’ ,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 ‘야당 탄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였으나, 피감기관의 허위답변과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뻔뻔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정감사 덕분에 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전혀 주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을 정치 공세와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나친 ‘청와대 구하기’ 로 국감장을 ‘청와대 방탄장’ 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 2018. 10. 16】

(3)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 을 슬로건으로, 은행의 금리조작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하였고, 2주차에는 보수대연합론(11명 자유한국당행 보도 가짜뉴스 논란)까지 나왔으며, 이후에도 큰 활력은 없었다.

(4)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심상정 의원의 dbrain 관련 ‘백도어’ 가능성 제기, 이정미 대표의 라돈 생리대 문제 등 라돈 생활용품이 언론에 조명되었다.

(5) 원내정당인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탄핵반대시위 중에 4명 사망 등 76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확인 지적하

였고, 민중당(대표 김종훈)은 KT 회장의 재선임과정에 대해 조명하였다.

5. 정부는 지적을 받지만 정책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야단을 맞는 무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정을 국민께 가장 균형있고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라고 하였듯이, 발뺌이나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닌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정확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10월 19일 2일차 기획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의 “언제쯤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지겠나?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지겠나?”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여 큰 실망감을 자아냈다.

피감기관장은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질의 의원과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배석한 직원들의 쪽지에 의존하는 피감기관장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증인 등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방해도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에 있어서의 파행은 크게 줄어 들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와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과 여야간 고성이가 오갔고, 여전히 국감 증인의 불출석 등 국정감사의 권위문제(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국방위 증인 연속 불출석)까지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올초 불거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과 관련해 김정수 경남도지사의 증인신청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정수 지사의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퇴장을 하였고, 10월 18일 방송문화진흥원 국정감사 도중 한때 파행을 겪었다가 19일 오전 11시를 넘겨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장에 대해 호통, 막말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김태흠 의원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마사회장님도 나중에 고발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다가 “마사회장님,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목소리가 높았고 또 모욕적인 부분으로 들렸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사과를 함).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 및 지연과 거부 등이 논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울시 국감이 일곱 번째 시작하는 국감입니다. 그동안 여섯 번째 국감을 실시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오늘 국감에 대한 서울시청의 수감태도와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의 명쾌한 답변보다는 논점을 흐리고 일방적인 자기 설명을 계속 고집하는 답변태도는 국정감사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에게 미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하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의원님 실로 자료를 갖다 드려서 마지막 29일 종합감사에서는 더 이상 서울시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에게 앞으로 제대로 경청하는 민의의 자세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를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서울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과거 정부에서는 피감기관의 불출석으로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비서실 업무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불출석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가 파행될 뻔하였다.

7.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30년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 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보장이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3차년도 국회에서는 감사내용이 화상으로 녹화되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 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시간 비행 등 비효율적이고, 국정감사 내용은 국감당시 알 수 없으므로 4차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해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외공관 국정감사 내용을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올려 놓아 국감이후에라도 볼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함.》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위원장님, 저희들 회의 시작할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자료 준비 과정에 대한 답도 없고 자료도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2018년 10월 25일)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녁 정회 직전에 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 소란하고 이런 가운데 질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수감기관 중인들의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정말 국회를 능멸하고 위원을 능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해서 지금 한 시간 동안은 밥도 못 먹고 완전히 거의 정말 정신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 2018.10.11. 과방위의 방통위 등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역대 최다인 753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0대 국회 4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18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

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 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서 국정감사 모범위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2016년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이번 20대국회 3차년도에는 국감도중 근친상을 당하였음에도 국리민복을 위한 국정감사를 포기하지 않은 두 분 국회의원을 모범의원상으로 시상하여 상명을 국리민복상으로 개정후 첫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요약함 (국회직, 다선, 가나다 순)

(가)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유한국당)은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번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대이슈였던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나타난 우리군의 일방적 무장해제 지적, 핵잠수함 건조 추진 필요, 마린온헬기 추락사고의 철저한 조사 촉구 등 엄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하는 등 심도있게 국정감사를 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국방부와 합참 국정감사에서 애매모호한 구역 설정으로 서해 NLL 무력화,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감시 정찰 기능 약화, 포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고립화, 국군의 전선을 허무는 GP 철수 등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곳곳에 나타난 우리 군의 무장해제를 비판하였다.

비대칭 전력인 핵과 생화학 무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등 북한이 우위에 있는 전력은 그대론데 합의를 검증할 조항이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단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다.

국군만의 군비 통제는 일방적인 안보주권의 해체이므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재협상 촉구,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4월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대한 용역 종료 결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해군에서도 자체 방어 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핵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조속한 건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린온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사고 중간발표 결과, 마린온헬기 추락 원인이 ‘로터마스터 균열’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이 남은 만큼 조사위는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국방위 조사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헬기 진동 수치 초과와 탑승자 인원 규정, 소방 안전 문제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사소위에서 검증하기로 결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나) 박지원 의원(법제사법위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시)은 중진의원이자 이슈메이커로서 철저한 감사준비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여 모범을 보였으며, 특히 국감 중반 배우자상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종합 국정감사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한번 제기한 피감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년간 추적하여 발본색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실 예산 수령과 관련해 여야간의 입장에 대한 조정적인 입장을 개진하여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법농단 등 사법신뢰 실추에 대해 추상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현 시국 관련 사법부의 대처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제기

하였다.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 맞은 양형과 판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성폭력 사범 실형 선고율이 하락하는 등 24.2%만 실형을 선고 받고 있고,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에도 44.6%만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워마드, 혜화역 집회에 5, 6만 명의 사람들이 분노해 거리로 뛰쳐 나오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사법부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형사사건의 지연처리에 대해 4년째 지적하고 있는 SAT 시험 문제 유출 재판을 거시하면서 재판의 생명인 신속재판을 주문하였으며, 법관 증원과 사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이 느린 실태를 지적하였고, 사법연수원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교육기관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재구성의 공백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82.5%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헌재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헌재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을 지적하였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농단에 대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향적인 영장 집행과 속전속결적 처리를 촉구하였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 법사위에서 11년째 지적을 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가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면서 교정청 신설 등의 제도적 개선을 독려하였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비리, 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며 3대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감사원 신뢰가 크게 실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 감사결과 조치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광주고법 등 지방감사에도 참여하여 5·18 관련 사법단죄를 강조하였으며, 법원이 사안마다 법리해석을 잘해서 억울한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대전지법 판사들의 법원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와 국가경제의 운명을 살린다는 각오로 특허법원이 일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비상 상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면서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SAT에 대한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5공 전사> 등 관련 자료들을 적극 공개하고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주문하면서 10월 19일이 여순사건 70주년이었는데 여순관련 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다) 최연혜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 행정경험과 기개 그리고 강단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기관장급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정책의 난맥상과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준비된 국정감사로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모친상을 당하여 종합국감을 하지 못하였지만 국민복을 위한 감사위원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이다.

먼저 기관장급 인사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정부 인사 적폐를 제기하였는데,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원안위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밝혀서 종합국감 전에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회 위원 이력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종사자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 및 방통위 선례에 따라 당연 퇴직 대상임을 밝혀 이슈화시켰다.

정부가 여러 고용지표가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되자 ‘긴급’, ‘초긴급’이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고하라고 압박해 몇몇 공공기관은 채용 계획도 없고, 예산 사용 근거도 없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소속 연구원에 두달 짜리 단기 일자리 500개를 만들라고 통보했음을 질타했다.

2030년 전기요금인상률 산정근거가 된 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임을 밝혀내고, 태양광 투자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비용 산정 및 외부비용을 미반영하여 발전원가를 낮춘 반면 원전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위험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던 점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기업에 국가 R&D 자금을 몰아준 행태를 조명하였는데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지적했다으며, 김범수 증인을 상태로 포털의 언론성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댓글조작문제를 지적했다 크라우드싱센터의 전기사용량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의 관련성을 점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북한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이런 영상까지 틀어 주면서 거기다 북한이 꼬박꼬박 돈을 챙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보화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의 IT 업체들이 고사직전이라면서 발주 방식의 변경검토를 주문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20년 동안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

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태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과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국무위원 등 제외),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지와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고, 시찰 등이 적었는 지 여부와,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회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 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 및 모니터명패의 마련 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이번 정기국회 운영의 최대 뇌관인 재정정보원 정보 유출논란 속 진행되었으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정당을 떠난 공정한 진행으로 정부여당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이었으며, 10월 10일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부터 29일 종합감사까지 문제

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조세, 재정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 충실한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간 날카로운 대립의 상황에서 여당의원이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중립적인 진행을 하였으며,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섬세한 평가를 가미한 마무리평가를 하여 호평을 받았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의 적정성 문제,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의 적절성 문제, 정책 수단으로써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문제점, 세무조사 성격의 사후 검증, 현장 확인 시 납세자 보호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근로장려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과 주세제도의 개편 필요성,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범무법인, 세무·회계법인 편법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대응 문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고,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 우수 조달기업 지정제도 및 외자물품 구매제도 개선,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조달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의 적절성 문제와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혁신성장 추진 필요성,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의 문제점, 부동산 대책의 적절성, 대북 경제제재 조치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소득 양극화 심화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인가 사전내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정책목적, 적정성 여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조정 필요성 여부 등

에 정책점검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성 여부, 면세자 축소 및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보편적 증세 공론화의 필요성 여부, 지방재정분권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은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여야의원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농림, 해양수산, 산림, 축산, 식품분야의 정책 난맥상을 점검하고, 위원장이 매 의원 질의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처럼 위원들의 전문성을 반영한 특성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의원의 질의 시마다 절제된 평가로 감사분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피감기관의 허위답변 등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 목표가격 산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충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 및 발전적인 집행, 농산물 개방 압력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일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 해양수산 R&D 성과 미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수산직불제의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 연안여객선 공영제 방식으로의 단계적 확대, 생사료 자원으로 남획되는 치어 보호를 위한 배합사료 등 대체 사료 활용 증대,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 침몰 선박 인양 및 잔존유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폐선 보조금 지급 확대, 지자체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국고지원,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있었다.

전주에서 진행된 농진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의 제시가 있었고, 밀묘 농법의 특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산림 훼손 문제,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낮은 임가소득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적정성과 필요성, 법률로 상향 조정,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대책 마련, 남북 산림협력 방안 준비 철저 등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및 유통사업 구조개선, 쌀 가격 회복 등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평화수역 조성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지정, 안전구조경비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노후화된 해경 형사기동정과 방제정의 대체 건조 추진, 여성 해경 및 의경의 인권보호 강화, 수상레저기구 안전 확보, 해경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체계 내실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항만 내 유해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명예퇴직제도 및 성과급 제도 방만 운영 등과 관련한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있었다.

한국마사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마사업의 과도한 사행성에 따른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역기능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 닭고기 등 축산물 유통비용 경감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경마사업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행성 경감대책 마련, 불법경마 적발체계 개선, 도박 중독 예방·치유 적극 지원 등 한국마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있었다.

(다) 보건복지위원회(이명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37개 피감기관별로 보건과 복지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하였으며, 국민들의 먹거리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HACCP 제도의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불시평가 확대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국감기간 내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인터넷 중계와 국회방송(생중계, 인터넷중계)을 통해 국감 전 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거의 국정감사장을 떠나지 않는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면서 그에 합당한 평가발언을 하고, 피감기관의 불어뻑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수감질서를 바로 잡아 호평을 받았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국민연금기금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이 큰 줄기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상담된 시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라돈 생리대·결핵이나 감염병 예방대책 등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들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재정전망의 적절성과 재정부담의 용인 가능성,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 아동수당 지급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추계의 정확성,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 결핵 예방정책 및 감염관리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과 의료인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비리, 부정확한 진단검사에 대한 건보재정 손실 과다 문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미지급률이 증가하는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 등 사업 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이 있었고, 가족간병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 예산의 효과

성 확보,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국민 수요에 맞는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 발달장애인 대상에 대한 교육 지원 문제,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자의 안정성 문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와 마늘주사 패혈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면서 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초코 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일처리와 근본적인 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해외 직구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최근 소비 경향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방안을 찾고 한약재·치약·생리대·분유·의약품·자외선차단제 등의 부적절한 제품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농약 PLS에 대한 현황파악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실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전주에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운용과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연금공단의 주식 대여와 주식의 ‘공매도’ 로의 악용, 전범기업과 범죄 연루 기업에 대한 투자, 일부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률 저조 문제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연금의 재정계산과 관련해서 재정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지급 보장 명문화나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또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의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원주에서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와 방향에 대한 정책감사가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 지출의 확대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제도 개선 또 미납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급여 지출의 축소, 부정수급 척결 등 근본적인 건보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암환자들의 고통 절감을 위해서 암투병 환자의 환자 분류 적정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개인 요양기관의 관리대책 강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방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급여항목 증가에 대한 심사체계 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위반 시 처벌 강화, 투약 이력 확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 오래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라)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여야의원들이 합심전력으로 고용률 저하, 실업을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여야간의 정책조명이 있었으며, 매 일정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감 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피감기관에 대한 충실한 감사진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는 평가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최저임금, 일자리 문제 등 여야간의 대립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중재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면서, 피감기관의 잘못과 관련, 관련 기관 책임인사를 호출하는 등 매서운 국정 감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생중계로 부작용이 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어 위탁 사업체만 이롭게 하는 직업능력훈련 사업의 문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 필요성,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의 과도한 불용 문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 문제와 지역별 차등 적용 등 개선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방송 보조 출연자와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발전사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산재사고 대응 및 고용노

동부의 사고조사 필요성, 옥시 부당해고와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사고조사 필요성, NCS 채용방식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방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일반회계 이관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환경부 분야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만연하는 수치 조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술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철강 등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하락 문제, 심사 당일에 평가기준이 바뀌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관한 질타가 있었다.

비무장지대 보호를 위하여 유해발굴 사업용 도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 유해화학물질 포함이 의심되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성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후 조치필요성, 부족한 인력,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환경부의 올바른시스템,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미국 독거미 라쿤 등 외래종 동물에 대한 환경부의 미흡한 대응, 유해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필요성, 법적 근거가 없고 대국민 홍보 효과도 미미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과 협회에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는 환경부의 행태, 환경부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협회 재취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분과위원장이 편중되어 형평성을 상실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 관련 혼포장 수상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 관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생활용품 방사능 문제, 민관 협력에 근거한 통합환경관리제도 활성화 필요성, 남북 환경 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축 복원 필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계획 및 관리로 인하여 총체적인 난관에 빠진 폐비닐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해 정책점검이 있었다.

태양광과 관련해 60년 동안 고생해 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야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미비한 것은 입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상청과 관련해서는 기상장비 노후화 문제, 기상오보문제에 대한 질책이 많았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방법

-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04)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확인
-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 18) 일문일답식(물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2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 25) ① 국감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에,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주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등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의원별 총질의 횟수와 총질의시간을 통계화 하였습니다)과,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④ 그런 연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27) 유권자를 우롱하고, 국회를 망치는 ‘짜통상’의 수상소식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 홍보의원은 감점함
- 28)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법과 제도 미비 지적 예시》

전해철 의원, 핀테크 사업관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정비 필요성(2018. 10. 11. 정무위)
○전해철 위원 마무리로 해서,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진행 과정 같은 것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야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또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활용의 정도가 매우 낮고, 규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마는 그래서 상당히 초기 단계 영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서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면 개인들의 자산관리서비스와 같은 대고객서비스도 좋아지고 이쪽에서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한 주요한 부분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참고인의 말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제도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무차입공매관련 제도 보완(2018. 10. 11, 정무위원회)

○이태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공매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소액투자자나 개인투자자의 불신과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하는 기관이나 세력은 주가를 떨어뜨려야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교란이나 시세조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먼저 보여 주려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숨방망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에 71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는데 이 중 26개사만 4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5개사는 단순주의 처리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금융위의 고민이 필요하고 또 무차입 공매도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징벌적 수준의 처벌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누적 주식 대여잔액을 합치니까 거의 1000조 원에 가깝고 1일 평균 대여잔액이 5945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대차를 통해서 공매도로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 주식 대여로 인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져오고 또 국민연금도 주식투자 손해를 보고 또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 대여를 금지시키는 주장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주식 대여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 또 아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처벌 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우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법률 개정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르게 운영하고 법률 개정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가업승계기업 상속세 관련(2018. 10. 29. 기획재정)

○심재철 위원 가업승계 요건을 좀 완화를 했으면 싶은데요. 100억 원짜리 기업을 승계를 하면, 상속을 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국감……

○심재철 위원 상속세가 50% 되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한테 할증 30%가 또 붙고 그래서 65%의 상속세가 나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데 케이스를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심재철 위원 100억 원짜리 중소기업을 키워서 상속을 시키면 상속받는 사람은 35억짜리로 쪼그라들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6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승계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쓰리세븐’ 이라고 손톱깎이 회사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들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락앤락’ 이라고 주방용기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속세를 건디지 못해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가업승계 요건들을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요.

○심재철 위원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5G 주파수 배분관련(2018.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선숙 위원 유영민 장관님, 제가 이미 보고서로도 냈고 5G 주파수 배분 문제에 우리 통신 3사에게 실제로 1조 원 정도의 사실상 삭감 효과, 주파수 가격 삭감 효과를 가져다 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셨겠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절차 위반입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는 알고 있고, 그것도 제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박선숙 위원 예, 절차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의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역시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 보고서에 포함시켜 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저의 주장을 반론하시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권 의원, 애완견 사업 관련(2018. 10.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장관님, 애견 산업이 축산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다소 자연스럽지는 못 합니다마는 현재 애견도 축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애매모호하지요. 아직까지 애견을 번식하고 분양하는 업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종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동물, 애견 뭐 이런 애완동물 하는 분들이 1000만 명 시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 맞는데 법적 제도적인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금이 도에서 애견 산업을 매개로 해서, 꼭 기획부동산 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간 그 자료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도 안 되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재외동포 여권과 기소중지 및 하위규칙 개정 관련(2018. 10. 10.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오랫동안 해외에 있게 되면 국내 주소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송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고소 고발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 있는 해외동포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고소 고발이 되어서, 국내에 없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조사를 받지도 못하고 송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중에 수사기관은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외동포는 이런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때 기소중지가 되어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재외공관에서는 일률적으로 여권 재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상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권법 12조에 보면 외교부장관은 기소가 중지되거나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돼 있는 사람 중에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다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속행위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재발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잘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고소 고발이 돼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 동대문경찰서에서 당신 이런 것으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권 발급이 안 된

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게 여권 발급이 안 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가 거주 이전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외여행, 해외 거주 이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올해만 해도 107건, 작년에 396건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교포들이 많은데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외교부장관의 재량권이라고 하면 재량권을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이하 생략)

김정재, 여근해어업 감척제도 관련(2018. 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위원 1차 연근해어업 감척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척 실적입니다. 지금 근해어선은 직권으로 감척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33척이지만 46척으로 13척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연안은 자율 감척인데 678척이 계획보다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감축하는 목적이 됩니까, 수산자원을 더 늘리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근해어선은 1척당 평균 233t을 잡습니다. 그래서 46척을 곱하면 1만 718t입니다. 그다음에 자율 감척을 한 연안어선은 1척당 4t입니다. 계산을 하면 6288t, 토털 1만 7000여t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 오면 아시겠지만 강도 높은 감척은 굉장히 많은 어업인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지요. 어자원이 더 확보가 되고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근해의 총생산 어획량은,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것 어자원 확보에 별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2차 연근해어업 감척제도를 용역 중에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김정재 위원 결과 나오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배만 줄여라, 평생 배 하나 믿고 일해 오신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무조건 줄여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자율적으로 하라고도 하지만 거의 협박에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지금 선진국에서 성공 사례로 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이지요. 그래서 TAC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제 살을 깎는다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항공산업 정부조직 관련(2018. 10.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백재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항공산업을 흔히 산업의 꽃 또는 기술역량의 총화 이렇게 부르면서 항공산업이 최첨단 산업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다음으로, 그건 한 30년 산업을 발전시켜 가면서 의미 있게 키워 왔던 산업들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 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용유발계수로만 비교하더라도 자동차산업은 1.9밖에 안 돼요. 1억 투자하면 고용효과가 1.9명이지요. 조선산업은 2.4명인 데 반해서 항공산업은 무려 5.4명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자동차산업의 약 3배, 조선산업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항공산업을 우리의 아주 전략적인 산업으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워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과 단위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항공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항공과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하는 일하고 산업부가 해야 될 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봐요. 산업부가 총

대를 매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항공산업 중요성 많고요. 저희들이 도전해야 될 분야고 과 설치의 필요성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부처 간의 칸막이로 해결이 안 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국감장이니까. 뭔가 그래야 대안이 나오는 거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러니까 행자부 쪽의 조직 확대 논리가 하나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일도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백재현 위원 아니,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산업부가 이런 지금 현재의 구도하에 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현재 아까 자동차항공과라고 반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일단은 역량을 더 높이고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지적 사례 예시》

박주민 의원, 실물화상기 구입 관련(법제사법위원회, 2018. 10. 10.)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그 비싼 기계의 성능 등 화질이 나쁠 것이라 하고 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의 고사양의 제품이 지금 필요한가? 두 번째, 제품의 성능을 살리려면 고성능 빔 프로젝터나 모니터 등과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고사양의 실물화상기만 대량 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논리적인가? 세 번째로 제품의 구매처인 회사가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인 회사인 점을 포함해서 그 과정과 절차가 이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연회만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17만 원 정도에 팔리는 스위처를 한 13배 정도 비싼 개당 210만 원 정도로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유지·보수 등을 일체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비싸게 구매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에 불과합니다.

처장님, 핸드폰 사서 쓰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핸드폰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 5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수리해 줄 테니까 시가보다 13배 비싸게 사세요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13배 정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13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아마존에서 확인한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아마존 제품이 우리나라……

김도읍 의원,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2018. 10. 10,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 정액 지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정액 지급이 아니라고, 임의로…… 원래 공보 운영비라는 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정액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감사원……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400만 원씩 받을 때 이게 정액 지급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지급 방법에 불과하지 그게 정액 지급……

○김도읍 위원 일곱 번 받는데 네 번을 400만 원씩 받고요, 이틀 상간으로 한 번 300만 원, 100만 원 받고요. 정확하게 법원행정처장님은 대전지방법원장으로서 한 번 받을 때 400만 원씩 받았어요.

김도읍의원, 불법시위 변상금 지원 문제(2018. 10.12, 법제사법위)

○김도읍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모 일간지 머리기사를 제가 읽어 볼게요.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국고 손실 계속된다…… 건설사들에 480억 더 물어줄 판’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행위…… 정부 34억 구상권 청구 포기’ “업체들 손실 국고로 메울 판 ‘불법도 용인’ 나쁜 선례 남겨”…… 강정마을 불법시위꾼들에 의해서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우리 국민 혈세로 시공사에 물어준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건설사별로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도읍 위원 전체 액수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오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 남북협력기금 유상 이자(2018.10. 29.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위원 지난 27년 동안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약 6조 8000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무상이 3조 7000억 정도, 유상이 3조 600억 정도. 한 반반 정도씩 해서 무상·유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자 받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계속……

○심재철 위원 못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계속 상환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이자 총액만 428억 24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성식, 직무능력관계없는 직업훈련 예산지원문제 (2018. 10. 19,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위원 맨 밑의 박스를 봐 주시면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참여자 298만 명 중의, 300만 명 중의 47.1%가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있잖아요, 정보화 관련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돈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아닌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연계된 취업률 39.7, 관련 분야에 간 것은 15.3, 6개월 고용유지율 54.1, 12개월은 20.7…… 물론 통계 숫자가 그렇게 쉽게 개선은 잘 안 되겠지만 직업훈련 체계도 정비되지 않으면 이대로 예산만 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이 자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자리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기재부는 예전에 일자리 심층평가를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2016년인가 17년인가 한 게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지원 일자리 예산이 어느덧 1조를 넘어서 30조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필요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혹은 취약계층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통계의 허허실실이 없는가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OECD에 맞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예산이라도 항목을 조정하는 문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아주 좋은 제안과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또 가능하면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중감 때까지 2차관께서 최소한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2018. 10. 29.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 서울시교육감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내년부터 현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빙, 어디다 썼는지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 맞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조금 보완설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만 원 현금 지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그러니까 연 240만 원이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빙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성가족부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주무부처인데 여기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20만 원을 그렇게 월별 지급하고, 그것을 애내가 무슨 유흥비로 썼는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는 데 썼는지, 아니면 책을 사서 봤는지 무슨 문화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런 유입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가부에서 이미 기 시행 중인 내일이룸학교의 훈련수당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수업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직업훈련 지원……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중복돼서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도 아시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예.

그러니까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희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학업복귀,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학업복귀가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사정들도 아마 제각각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KBS 고액 연봉 관련(2018. 10.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윤상직 위원 나는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두고 KBS 공영방송이라고? 누가 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진미위가 다시 정의를 세운다 하더라도 KBS 내부 직원들과 국민들은 이 하나 딱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취를 정말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KBS가 이러시면, KBS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우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지금 중간방송 타령하기 전에 60%가 넘는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청률 똑똑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을 주고 있는, 출연료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EBS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외교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전용관련(2018. 10. 10,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전용과 관련해서 3만 건 가까이를 거의 실제로 다 조사하다시피 해서 문제가 있는 것 250개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 하나하나 소명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250개가 담당자하고 저희 방보좌진들이 함께 해서 추려낸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교포들 이런 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본연의 대상과는 다른 부분들이 10%쯤 되니까 열에 하나 꼴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책을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행사 지원비로 전용된 케이스가 이렇게……

PPT로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소명이 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즉 공개할 수 있는 행사비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비로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과거 정보비로부터 왔던 흑역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아직 완전히 체질 개선이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할 것은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공개하지 않을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분명하게 갈라서 정책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양수 의원, 업무추진비 전용관련(2018. 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위원

얼마 전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얘기 꺼내 가지고 청와대 심야에 쓴 것, 11시 이후에 쓴 것, 휴일 날 쓴 것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해수부하고 해수부 산하기관을 봤어요. 휴일에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소명을 달면 된다고 그래요.

그 소명서를 봤더니 ‘OOO 업무 협의’, 모 임원이 휴일 날 쓰면서 ‘OOO 업무 협의’ — 이 앞에는 사람 이름입니다—그렇게 하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야? 모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쓴 사람은 임원이고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결재하는 사람은 부장이니까 그냥 써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한 음식점에서 세 번을 써요, 카드를 50만 원 이하로. 이것 당연히 쪼개가지요. 이런 게 그냥 대중만 봐도 막 나옵니다. 포장마차, 수제맥주집, 심야시간대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쓰지 말아야 될 곳에서 쓰지 말아야 할 시간에 썼습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못 하니까 산하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휴일에 종교시설 가면서 주차비 같은 거하고, 직장하고 자택하고 다른데 자택 가면서 출장 달고 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청와대나 감찰을 해야 될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더러 막 뭐라 못 그래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장관님은 안 그러시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것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 전수조사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발견된 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안들이 발견이 되어서 감사원과 함께 적절한 조치와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의원, 경기도 청년연금 관련 (2018. 10. 15,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정말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부담을 하는가. 분명히 경기도 청년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경기도는 4년간 한 500여 억 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앞으로 연금수령 이후 20년, 30년 동안 수십조 원의 이득을 줄 수 있어요. 굉장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투자로 들어온 돈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 중심으로 판단……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장이실 때 불교부단체 우선교부금이라든지 이번 청년국민연금을 보면 참 재주가 좋다, 저는 재주가 좋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여줘 드릴까요? 공유재의 비극 들어보셨지요? 연근해에 고기들이 많아서 어선이 나가서 고기를 막 잡아옵니다. 처음에는 고기를 잡아다 파니까 수익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가서 무료니까 공짜니까 고기 잡아다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니까 고기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새끼까지 다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보니까 정말 잡을 고기가 하나도 없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청년 18세 모두가 9만 원을 불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고기를 다 잡도록 허용하지 말고 몇 cm 이상 못 잡게 하면 됩니다. 잡을 기회를 공정하게 주면 그 문제는 없지요.

《지난해 시정요구 점검 관련》

심재철 의원, 어르신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2018. 10. 29)

○심재철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령을 인상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들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때 제 기억으로 노인 연령, 어르신 연령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향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랬을 경우에 해당되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혜택 문제를 갑자기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게 노인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해당되는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1년에 한 살씩 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고령화와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요건만 보기는 그렇고 다른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패키지로 보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 잘못 질타》

박용진 의원, 교육부 보도자료 부실문제(2018. 10. 29. 교육위원회)

○박용진 위원 거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으로 ‘1. 매매 허용, 용도 변경 등 출구전략 마련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출구전략 마련한 이후에 안내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갖다 낼 때 아무렇게나 대충 갖다 내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설세훈 과장이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예, 제가 교육복지 담당입니다.

○박용진 위원 이렇게 낸 거 맞지요, 국회에다가?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예,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 놓고 보도자료에는 또 아니라고 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저희 말씀드린 대로……

○박용진 위원 국회를 우롱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국회를 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진 위원 국회에다 대고 실수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영, 재외공관 긴급연락처 불통관련 (2018. 10. 10.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재외공관 긴급연락처,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에 가깝게 했는데요, 173개 재외공관의 긴급연락처 점검 현황인데 어찌 됐든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응답이 안 된 곳이 85곳입니다. 거의 50%에 가깝게 통화에 실패했는데 무응답, 연결 안 된 것, 불통 이런 것들의 숫자가 33개, 21개, 31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당연히 긴급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안 받은 곳이 26%에 해당합니다, 45개소.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민을 통해서 다시 걸어 보았는데도 통화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한국인 피랍사태가 일어난 리비아 이런 지역에서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재해가 일어났던 인도네시아나 일본 오사카 이런 데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말 어려울 때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외교부가 너무 지나치게 무장 해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하신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도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한 번 했고, 10월 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불통이 된 상황은 결국 현지에서의 통신 사정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9월 달과 10월 달의 점검 결과와 위원님께서 하신 결과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Ⅱ. 시정조치 점검으로 ‘붕어빵’ 국정감사의

적폐를 청산해야

(정권에게도 독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여야가 협력해 척결해야)

1. 국정감사의 본래적 참 의미를 찾아야

(1)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원구성이나 사보임으로 변동되더라도, 국회가 시정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집요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정하고, 예산낭비 요인은 척결해 나가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은 분명 아님에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난해 지적된 것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까지 피감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1987년 민주항쟁으로 부활하여 1988년부터 다시 시작된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만드는 적폐이다.

(3)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4년과, 제19대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붕어빵 국정감사”라

는 신조어가 생겼으나, 제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국회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시정조치요구한 사항조차도 제대로 시정조치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허위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들이 늘고 있었다.

참고로,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중복 봉어뺑 시정조치로 나타났다.

2. 201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시정조치 점검 모습

(1) 6년 동안 지적해도 아직도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0월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2012년 농협 신경분리정책에 의해 유통회사 5개를 2015년까지 통합계획을 세웠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6년 동안 해마다 질의를 하였는데 올해도 또 질의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 제19대 국회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같은 질의 답변중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8일 노인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위원장은 장정숙, 김상희, 윤소이, 최도자 의원의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19대(국회) 복지(위원)으로 앉아 있을 때 한 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감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라면서 도돌이표 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질의 70~80%가 지난해 지적한 것, 결단 촉구

국토교통위원회의 10월 18일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거의 반복되는 확률이 한 7~80% 된다면 시정조치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하였

다.

(4) 매번 지적하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어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10월 19일 한정애 의원은 서울고용노동청 등 7개 노동청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도 산업안전관리비 일부 접대비용 쓰고,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저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고용노동부 (박화진 실장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달라면서 질의를 하였다.

(5) 4년 연속 지적했는데 아직도 조치 안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10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SAT 시험 문제 유출 재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사법공조 회신문이 조작되는 등 문제점을 4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파악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는 사이 24명의 관련자들이 회유 등을 통해 벌금형을 수용하고 1명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이라며 “사법부가 금년 1월 피고인 인정 신문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5년을 끌어 온 재판을 마무리 해야지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 재판관련 사항은 답할 수 없다고, 무책임한 직무유기적 답변을 했다)

10월 29일 종합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으나, 회피성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법원은—다른 행정처장님이에요—‘가짜 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이게 미국 법무부에서 온 진짜 서류이고,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가짜, 짝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사 공조에 의거해서 이게 왔다고 하면 사법부에서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진실과 허위가 가려진다면 당연히 진실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재판사항이니까 간섭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한미 사법공조에 의거해서 미국 법무부에서 회신한 문건이 믿을 수 있습니까, 개인 기관

에서 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간섭이 아니라 법무부 한미 사법공조에 의거해서 제출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얘기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재판 간섭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행정은 그 사건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도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 드릴까요, 재판부에다? 그것도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2018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2018. 10. 29)

3. 봉어빵 국감 근절은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필요

(1) 국감의 단골메뉴인 ‘채용비리’ 역시 2016년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정은커녕 오히려 ‘고용세습’으로 진화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6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부 주요감사 내용 중의 하나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결과보고서 9페이지). 또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3번째 요구사항이다.(동 보고서, 112페이지)

2017년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여러 위원회에서 채용비리문제가 속속 불거졌다.

올해(2018)는 정무위원장 보좌진의 특채채용이 불거져 상임위 국감이 파행을 초래하는 등이 빚어졌으며, ‘고용세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조직적인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시정조치 되었는가를 확실히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매년 국

정감사에서 또 나올 것이 확실하다.

(2) 시정조치사항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심재철의원 등의 사건은 없었을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등 라돈방출 생활용품의 안정성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생리대 안정성 문제에 이어 진화한 것이다. 안전인증관리기준(해썹)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여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감사(2008년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국감에서는 멜라민 식품(김치)에 대해 관계 당국의 늦장 대처에 대해 장관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첫날 국감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에서 늦장 대처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바로 수거 검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식약청이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수거 검사에 들어간 것은 늦장 대처”라고 말했다. 또 “품목이 많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조치였음에도 늦어졌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가 늦었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정권이 바뀐 현 국정감사에서도 품목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만 더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유출의혹도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만 제대로 이행됐으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인데, 피감기관은 “예, 알겠습니다” 만하고, 국회는 결과보고서에 시정조치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2016년도 질의응답(2016년10월6일, 한국재정정보원 등 국정감사)》

질의의원	질의내용(요지)	답변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	----------	----------------------

질의의원	질의내용(요지)	답변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추경호	그런 상황에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킹 이런 데 대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어떠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는 해 놓는데 막상 일 터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이곳은 안 된다, 다른 곳은 설사 될지 몰라도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교일	지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	저는 재정정보원이 굉장히 잘 출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정보를 총망라해서 공개를 하는데, 가끔 해킹이 들어오지요?	예,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누가 주로 해킹을 한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인지 아이덴티티가 안 되는 거지요?	위낙 다양한 측면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 2018년도 국정감사(10. 16.화)에서 추경호 의원도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독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독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스템 개발·관리 관련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4. 시정조치가 거듭되고 있는 법사위 SAT 사건

국회가 수년째 ‘시정조치하라’ 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날조된 가짜증거로 유죄선고’ 하고,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잘못했다’ 고 공개적으로 감싸고 나서다가 이제는 재판관련 사항이라고 답변회피, 직무유기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에 판사가 가짜 증거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감사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고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 의

결(2017.1.20.)을 거쳐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감사·조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에 대한 회신이 아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의 보고로 국회를 우롱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로 지적을 받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법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와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나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여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회를 무시하며, 무력화시켰다.

국회 본회의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대법원의 답변내용(6개월 지난 뒤에 등재함)
『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후 재개된 ‘SAT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과 관련하여 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 (2017. 1. 20. 국회 시정처리요구)	『향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의혹 제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7.2.,71면) ※ 재판사무감사 실시여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는채, “향후 잘하겠습니다”고 위증함

지난해에는 엉터리 답변서로 국감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얼버무리면서, “SAT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100% 팩트와 다른 거짓 답변을 하였고, 올해에는 개별 사건인 것처럼 ‘재판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여 잘못의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5. 국정감사의 시작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시정처리결과보고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이 만들어져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각 부처로 내려가게 되며, 부처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정감사 2개월전에 국회로 보고하게 된다. 그

그러나 시정조치사항에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인지가 적혀있지 않아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정부가 보고한 시정조치사항은 허위보고가 되기가 십상이다. 국회는 올해부터라도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같이 기재하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실시하여 최소한 질의한 의원이라도 챙길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당을 정하여 꼼꼼히 챙겨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제20대 국회의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현황》

상임위원회	2016년도	2017년도	증감
국회운영	45	58	▲
법제사법	190	217	▲
정무	338	457	▲
기획재정	116	116	-
외교통일	597	476	▽
국방	200	290	▲
행정안전	175	15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71	61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595	579	▽
보건복지위원회	1,241	1,193	▲
환경노동위원회	538	530	▽
국토교통	554	648	▲
여성가족위원회	126	133	▲
교육문화체육관광	2,2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428	-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의 결과조치 결과보고서도 대체로 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백화점식 정책질의를 하면서 질의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요구사항도 많아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정조치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실효성없는 추상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많았다.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피성 결과보고서》

위원회(연도)	시정처리요구사항	답변 기관	시정처리결과
법제사법 (2016)	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후 재 개된 ‘SAT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법원)재판과 관련하 여 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 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 므로 대법원은 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 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할 것	대법원	향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이 나 결과에 관한 의혹 제기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사법신뢰 회복을 위 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수산 (2017)	행정부전체예산규모에 비하여 농업분야 예산 규모가 미흡한 실정 이므로 농업분야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 립 축 산 식 품 부	‘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체 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 농업농촌 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농업예 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림축산식품 수산(2017)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시 직원 차별과 위화감발생하지 않도 록대책을 마련할 것	농 협 경 제 주 지 회사	<시정 처리결과> □ '17.5월부터 별도의 통합전담조 직(유통혁신단)을 설치하여 유통자 회사 통합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법인 간 직원 차별과 위화감 조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수립 중이며, 원활한 통 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이 2012년계획당시부터 추진되 었는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
보건복지 (2017)	안전위협 사건이 계속해서 발 생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누장·부실 대응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 음.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 적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 해 결이 가능한 구조와 시스템으 로 개선 할 것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 시정·처리 결과 > ○ 일상에서 많이 섭취 접촉하는 유 해물질에대한 위해요인 분석 연구 사업(‘18.2 ~) < 향후 추진 계획 > ○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 립 및 취약분야 기준 규격 설정 등 관리(‘18.6 ~)
보건복지 (2017)	현재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 료질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중 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보 건 복 지 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서 의료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것		중장기 개선방향마련(' 17.11.) - 전향적 평가, 지역별·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 ○ ' 20년 전향적 평가 및 중소병원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8.4월~)
보건복지 (2017)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보 건 복 지부	의료-한의료-정부 간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포함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 논의 중 - 환자 중심,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 모색

Ⅲ. 20년전 국감과 비교해 보니,

국감일수는 줄고 피감기관은 2배 증가

1. 태부족한 국감일수 : 20년전 183일에서 168일(시찰포함)로 줄어

(1) 피감기관은 느는데 감사일수는 줄어

20년 전인 1999년에 피감기관은 352개 기관이었으나,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53개로 무려 401개 기관이나 늘어 났고, 지난해에도 701개나 되었는데, 그 보다 52개 많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국정감사 일수는 총 183일에서 총 168일로 감사일수가 줄었으며, 1999년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여 위원회별 평균 감사일수는 9.89일로, 1999년의 11.44일보다도 많이 줄어 들었다.

《제20대국회 3차년도(2018년도)국정감사 실제 감사일수》

위원회 (현원)	위원장 (소속정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순)	국감 기간	토일 휴일	준비 휴일	현장 시찰	실제 감사일수
국회운영(28)	홍영표(민)	서영교 윤재옥 유의동	2	0	0	0	2

법제사법(18)	여상규(한))	송기현 김도읍 오신환	20	6	2	0.5	11.5
정무(24)	민병두(민)	정재호 김종석 유의동	20	6	3	1.5	9.5
기획재정(26)	정성호(민)	김정우 추경호 김성식	20	6	3	1	10
교육(15)	이찬열(미래)	조승래 김한표 임재훈	20	6	5	1	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21)	노웅래(민)	김성수 정용기 신용현	20	6	2	2	10
외교통일(23)	강석호(한)	이수혁 정양석 정병국	20	2	1	1(0)	-
국방(17)	안규백(민)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20	6	2	5	7
행정안전(21)	인재근(민)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20	6	3	0	11
문화체육관광 (17)	안민석(민)	손혜원 박인숙 이동섭	20	6	4	3	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19)	황주홍(평)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20	6	2	0	12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29)	홍일표(한)	홍의락 이종배 이연주	20	6	2	2	10
보건복지(22)	이명수(한)	기동민 김명연 최도자	20	6	3	1	10
환경노동(16)	김학용(한)	한정애 임이자 김동철	20	6	3	1	10
국토교통(30)	박순자(한)	윤관석 박덕흠 이혜훈	20	6	4	1.5	8.5
정보(11)	이학재(미래)	김민기 이은재 김과녕	6	2	1	0.5	2.5
여성가족(17)	전혜숙(민)	정춘숙 송희경 김수민	2	0	0	1	1
검입위 포함 <<총계>>			290	82	40	22 (횃수23회)	130

* 주의: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4일, 해외에서 5~6일 실시하고 있음

(실제감사일수 제외함, 시찰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파행됨)

(2) 사진 뿐인 현장시찰도 역대 국회의 국정감사마다 다소 증감있으나

20년 전보다 5회 늘어나

현장시찰 횃수 역시 1999년에는 18회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2018년에는 23회(24회 계획)로 지난 해(2017)보다 27회보다는 줄어들었으나, 1999년보다 5회나 증가하였다.

현장을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현장시찰을 하고 있으나, 민간인 증인까지 불러서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감사시간을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현장시찰은 되도록 국감기간을 피해서 해야>>

(3) 민간인 증인도 늘어 : 116명에서 173명으로

1999년 민간인 증인 116명과 참고인 161명이었다. 올해 통계는 아직 없으나, 지난 2017년도 민간인 증인은 173명으로 1999년 보다 57명이 늘었으며, 참고인 역시 223명으로 62명이나 늘었다.

《20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갯수	총 감사 일수	대상기 관 (실시)	현장 시찰 횟수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23 (계획/실시)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갯수	총 감사 일수	대상기 관 (실시)	현장 시찰 횟수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2. 병풍국감, 하루에 32개 기관 감사, 답변기관은 3개 불과(국방위)

(1) 20년 전에는 하루에 평균 2개 기관꼴로 감사하였는데,

올해는 평균 5.56개 기관(외교통일위 제외)을 하루에 감사

20대 국회 10개 이상 기관을 하루에 국정감사는 경우는 168일 중에서 24일이었
다.

재외공관 국감을 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하면, 실제감사일수 130일 동
안 723개 기관을 감사하니, 하루에 평균 5.5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는 하루에 평균 2개 기관을 감사하였으나, 피감기관은 늘고, 감사
일수는 줄어서 동시 수감기관이 많아진 것이다.

10개 이상 기관을 하루에 감사하는 경우가 법사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경우
12일 감사일 중에서 4일이나 되었으며,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도 12일 중 3일
이나 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경우에는 68개 기관을 11일 동안 국정감사하
는 데 하루에 10개 이상인 경우가 4일이나 되었다.

(2) 1999년 하루에 8개 이상 국정감사 2일(정무위) 밖에 없었으나,

2018년엔 전체 피감기관의 50%가 하루 10개 이상 무더기 수감

국정감사 통계 자료집을 살펴보면, 1999년에는 8개 이상 하루에 감사하는 경우
는 정무위원회가 유일하였으며, 횟수는 2일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올해에는 10

개 이상 동시감사를 하는 경우가 24일이나 되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10개 이상 동시 병합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지연시 의사 진행발언을 한 내용처럼 “중요하지 않은 피감기관”이 없는 바, 피감기관수와 감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 현황》

위원회	횟수	10개 이상 동시 감사 기관수	전체감사일수	위원회 전체대상기관수
법제사법	4	56	12	73
교육위	2	33	9	63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	3	63	12	80
국방	3	54	12	66
행정안전	1	12	11	37
문화체육관광	3	48	10	81
산자중기	3	36	12	61
보건복지	1	12	11	37
환경노동	4	61	11	68
계	24	375	168	753

(3) 다수기관 동시 국정감사는 업무보고 외에

답변없는 경우 120개 기관

법률소비자연맹이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회에 올라온 영상회의록(종합국정감사 제외)을 분석해 본 결과, 2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중 무려 120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국정감사 2개 기관 이상 동시수감 미답변 기관 현황》

(2018. 10.10~10.29: 조사일 2018.11.14)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미답변 기관수
문화체육관광	10. 10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기관	8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미답변 기관수
법제사법	10. 10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6개 기관	3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기업	10. 10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등 7개기관	3
국토	10. 10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1
국방	10. 10	국방부 등 32개기관	29
환경노동	10. 11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3
문화체육관광	10. 11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7
외교통일	10.11	통일부 등 4개 기관	2
교육	10.11	교육부 등 7개기관	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11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1
법제사법	10.12	법무부 등 5개 기관	3
환경노동	10.15	기상청 등 16개 기관	11
문화체육관광	10.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기관	1
보건복지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 함) 등 6개 기관	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16	한국전력공사등 8개기관	2
행정안전	1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12개 기관	1
환경노동	10.18	한강유역환경청 등 12개기관	4
문화체육관광	10.18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	1
환경노동	10.22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기관	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22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기관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	11
법제사법	10.23	대전고등법원 등 10 개기관	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23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	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23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1
환경노동	10. 25	환경부 등 7개 기관	4
교육	10.25	부산대학교 등 20개 기관	2
	계		120

Ⅳ. 화제(話題)로 본 2018년도 국정감사*¹⁾

1. ‘들러리’에서 ‘주목받는 기관’으로 변신한 피감기관

(1)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도에는 위원장(당시 위원장 홍영표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려성 질의에 대해 답변기회를 얻은 것에 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는 들러리 피감기관이 아닌 주역 피감기관화되었다.

[2016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의 배려성 질의]

- 위원장 홍영표 오늘 첫 질의이지요,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2016년도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특히 올해(2018) 10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강박하였고, 여야당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으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이 보통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2) 한국재정정보원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30여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심재철 의원에게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감사에서 빠지라”며 공세를 폈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놓고,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여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3) 통계청

기관 합동이 아닌 사상 첫 단독으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는 강신욱 통계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위한 코드 인사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특히, 야당은 2분기 가계동향 통계 직후 통계청장이 교체된 배경을 집중 공격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자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위해 현재의 강 청장으로 급히 교체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통계청장 교체는 차관급 교체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였다.

강 청장 역시 코드인사 주장의 한 근거인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때 작성한 가계동향 분석 보고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코드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2. 이번 국감의 쟁점 등을 나타내는 국감 소품

(1) 어처구니 없는 멧돌 (일자리 대책 관련)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장에 손잡이가 없는 멧돌을 들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뉴스’ 차단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멧돌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는 멧돌을 들고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누리꾼 사이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소품”이

라는 지적이 나왔다.

(2) 퓨마 닮은 뱀갈 고양이 (정부의 과잉대응 유무)

국감 첫날이었던 10월 10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세종시 국무총리실 등 국정감사장으로 공수해온 ‘뱀갈 고양이’가 감사장에 등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를 언급하며 동물 관리체계와 사후처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퓨마 대신 비슷한 외형의 ‘뱀갈 고양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 고양이를 장시간 철장에 가둔 채 국감장에 방치한 것을 놓고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이 직접 SNS에 사진을 올려 고양이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3) 배터리문제 K11소총 (자주국방의 현주소 관련)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K11은 배터리가 없으면 못 쓴다. 배터리 하나 용량은 8시간밖에 안 된다. 응급으로 한 사람당 11개씩 지급을 하는데 전쟁 나면 이 총은 나홀이면 더는 못 쓴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중 감사위원이 사용한 소품 및 시연내역》

(언론보도 중심)

의원명	일자	대상기관 (위원회)	소품명	등장이유 / 목적 / 배경
김진태	10월 10일	국무조정실,국 무총리비서실(정무위원회)	뱀갈 고양이	9월 18일 개최된 탈출한 퓨마에 대해서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
박성중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 원회)	AI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음성정보 저장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역차별 받는 것을 지적
박대출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 원회)	맷돌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통해 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지적함

의원명	일자	대상기관 (위원회)	소품명	등장이유 / 목적 / 배경
송희경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과학기술 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실리콘 지문	가짜 지문으로 생체인증을 통과하는 모습을 시연하면서 현재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이 가짜 지문을 만드는데 활용될 위험성,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김병기	10월 14일	방위사업청(국 방위원회)	K-11 복합소총	고가장비 K-11 복합형 소총이 배터리 문제로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함
조정태	10월 15일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등(문화체육관 광위원회)	효자손,부 채,곰방대 ,복주머니	인사동 등을 비롯해 국내 관광지에서 파는 효자손, 부채 등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특색있는 기념품이 없음을 지적함
김수민	10월 16일	문화재청(문화 체육관광위원 회)	개량한복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청이 퓨전한복(개량한복)은 고궁 출입시 무료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전통복식의 문화의 절대적 보존이 아니라 효율적 보존으로 새 가치 창출을 강조
김성환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 부등(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액체 괴물	액체괴물 안에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성 물질이 똑같이 들어 전량 리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동섭	10월 18일	한국콘텐츠진 흥원 등(문화체육관 광위원회)	태권도 도복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의결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문화계 산하기관 국정감사임에도 도복을 착용했다고 설명함
박대출	10월 11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 회)	대형 두루마리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정리했다며 길이 13.5m의 대형 두루마리를 펼치며, 방송장악 의도와 가짜뉴스법을 비판함(항의로 정회소동)
송희경	10월 12일	원자력안전위 원회 등(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 원회)	라돈 측정기	라돈측정기 시연 후, 원안위의 인력과 장비가 없고 장비가 있더라도 노후화돼 문제점을 지적
이용주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 부(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	온수 매트	최근 불거진 침대 매트리스 내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 논란만큼 온수 매트리스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려 온수 매트리스를 준비
정유섭	10월 15일	한국석유공사 등(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	석유 정량탱크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일반적인 검사 탱크에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 스테인리스 강판 재질의 탱크는 스파크가 튀면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함.
송희경	10월 30일	여성가족부(여 성가족위원회)	베이비시 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

의원명	일자	대상기관 (위원회)	소품명	등장이유 / 목적 / 배경
			자격증	
김정재	10월 19일	한국마사회 등(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찍	엄청나게 아프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고통을 전가하는 채찍의 문제점 지적

《2017년도 국정감사 중 감사위원이 사용한 소품 및 시연내역》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의원	내용	비고
10.12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희경	EMP, 전자기파 충격기(자체 제작)	
10.12	외통위	외교부	윤영석	생존배낭	
10.12	행안위	행정안전부	이재정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맞추는 시연	
10.12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최연혜	폐 태양광 패널, 세척제	에너지 공단 지 협 조
10.12	국토위	국토교통부	정용기	난임주사기	
10.13	산자위	특허청	이찬열	작통가방	
10.13	환노위	환경부	이정미	생리대	
10.13	환노위	환경부	신창현	생활화학제품	
10.13	복지위	보건복지부	박인숙	링거	
10.13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이동섭	황금프라이팬	
10.13	행안위	경찰청	진선미	국감장설치 몰래카메라 공개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한표의 자유한국 당 의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유인물	
10.16	행안위	소방청	이용호	소방도끼, 랜턴	
10.16	행안위	소방청	진선미	소화기	
10.19	법사위	감사원	노회찬	신문지 깔고 드러눕기 퍼포먼스	
10.19	행안위	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박성중	테이저건	
10.24	환노위	환경부	이용득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박제	

※ 10. 16.그리고 국정감사 보이콧 이후 국회의원 개인 PC 슬로건 부착이 파행의 원인이 되면서 이슈가 됨

3. 언론에 뜬 국정감사장의 민간인

(1) 백종원 대표이사 (골목상권 대책)

백종원 대표는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백종원 대표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해 18만명 이상 요식업을 시작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90% 이상이 폐업을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선부르게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진 만큼,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을 전개했다.

특히 백종원은 “신고만 하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 너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종원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 선동열 감독 (야구선수 선발 관련)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지난 10일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손혜원 의원은 선 감독에게 주제와 거리가 먼 연봉, 계약조건 등을 질문하면서 “전임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시즌 성적을 제시하는 등 ‘막무가내 지적’ 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3) 유은정 대한항공 승무원 (근로복지 관련)

유은정 대한항공 승무원이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어려운 근무환경을 설명하였다.

(4)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 (체육계 비리관련)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은 ‘테니스계 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4월 18일 발표한 대한테니스협회 감사 결과와 정관 등을 지적했는데, 안 의원의 지적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느냐”며 해명을 시도했으나 안 위원장이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곽 회장이 “그럼 질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설명하겠다”고 반발하자 안 위원장이 ‘테니스계의 듣보잡’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원장의 발언에 곽 회장은 “지금 듣보잡이라고 했느냐”며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것이냐”고 하였고, 이것이 언론방송과 유튜브 등에 나돌며 크게 회자되었다.

(5)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외협력부장(유치원 비리 관련)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헤드랜턴을 쓰고 답하여 화제가 되었다. 랜턴의 조명을 켜 뒤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한다"며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간다는 원장도 많다"고 호소했다.

(6) 전순자, 김영미 참고인 (탄핵집회 시위 사망 사건관련)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늦어져 서울시경 국정감사는 심야에 진행되었는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신청으로 등장한 두명의 참고인은 울먹이면서 “무대 뒤쪽인 것 같아요. 무대 뒤쪽 거기서 저는 압사당해서 지금 목수술, 허리수술을 했거든요.” “구급차도 얼른 오지도 않았어요.” 등 2017년 3월 10일 현장에 대해 증언을 하였는데, 심야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에 널리 퍼져서 회자되었다.

4. 곤욕을 치른 피감기관의 장

(1) 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장에 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장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11일 교육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중지됐는데 유 장관의 증인선서 직전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이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11건의 의혹 중 공소시효 마감, 자료 제출하지 않아 밝히지 못한 의혹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입대는 경매 입찰방해,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하고 기자간담회 허위신고는 정치자금법, 우석대 조교수 허위 경력 기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고, 일시 파행까지 겪었으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질문 패싱을 당하였다.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월 15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의 증인 요청으로 출석한 유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압박을 받은 점을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참이었지만, 해명 청취를 놓고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정부측 답변 있어야하니 간단한 답변 기회를 줘야 하며 기회 공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역시 “특정 직무정지된 국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라며 “답변을 듣지 않으면 진행상 옳지 않다”고 민 위원장

을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병두 위원장이 감사중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정위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박상기 법무부장관

현직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구설을 빚기도 하였다. 10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없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1일 결핵 등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발언에서 “미국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의료지원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막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월 12일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여 위원장 요구에 “답변을 준비해 주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전에 박 장관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말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한들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떠났다. 여 위원장도 결국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점심시간에 내용을 파악해 오후 감사가 속개하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달라”며 박

장관에게 주문한 뒤 낮 12시30분께 정회했다.

(4)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일자리 관련)

김낙순 한국마사회장도 마사회 일자리쟁취기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고, 거친 말 때문에 여야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등 소동을 겪었다.

한국마사회장은 마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알지 못한다” “알아보겠다” “죄송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고, 김회장의 답변 태도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거친 발언으로 한동안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회장은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직접 뒤에 가서 마사회 간부들에게 왜 회장을 돕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정회를 요청할 수준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당한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5)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감 마지막날 사퇴)

강정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자격논란이 있었다.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인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됐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가 된다. 야당의원들이 강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연구에 직접 관련된 출장이 아니었고, 연구비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미국 워싱턴 체류 비용뿐 아니라 왕복 항공비와 학회 참가비까지 연구비로 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0월 29일 사퇴했다. 이번 국정감사 중 사퇴한 최초의 기관장이 되었다.

5. 인기(관심)를 모은 국정감사장

(1) 질의보단 옷으로 뜯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월 16일 ‘한복 국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인기를 모았다. 안민석 문체위원장(민주당)제안으로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 “다음날 문화재청 국감이니 드레스코드를 신경써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안 위원장은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나왔다. 안 위원장은 “약탈 문화재 환수 협상 때 입었던 두루마기를 입으려다 못 했다”며 “우리나라의 귀한 전통 의상을 입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태권도 공인 9단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왔다. 태권도를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명시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는 태권도의 올림픽 공식종목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백종원 대표가 등장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대책)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더본 코리아 사업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 더본 코리아 외에 더본 아메리카, 더본 차이나 등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TV ‘한식대첩’,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해박한 음식 정보를 전하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중소기업을 빠져나갔다”는 지적에 “저희가 빠져나가려고 나간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웃으며 답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매출상한선을 두고 3년 평균 매출액이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등도 박탈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려는 게 아니고 준비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오픈한 분들은 고

쳐가면서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

(3) 김성태 원내대표 수난 행정안전위원회(고용세습논란)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방문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고며 시청 방문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은 파행되고 지연되어, 서울시경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겼다.

(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선글라스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실세논란)

11월 6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에 방문하였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시력 때문이라고 하여 해명하였으나, 이 선글라스와 관련하여 청와대 실세 논쟁과 비무장 지대의 위치공개 등 군사비밀 노출 등이 문제가 되어 자정 너머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V.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감 진행상의 특징

1. 기관장의 교체로 취임 하루 후 국정감사 등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제아무리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하였는 데,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국정감사 직전 기관장의 교체로 인해 피감기관의 장이 취임 후 하루 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

합참의장은 취임 하루 만에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경우에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감사장에서 ‘패싱’ 논란 등 화제가 집중되었다.

실제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역시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서 쏘지만 실무통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조명래**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중이었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임명됨)대신 차관이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말미에 차관에게 장관대신 수감을 한 것을 치하하며 ‘차관님,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장관 뭉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특활비가 살아 있으면 일부 떼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요새 완전히 짱입니다.’ 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2. 국정감사 중 문화체육관광위는 금요일마다 시찰(불금 시찰)

2016년 21회 보다는 늘고 2017년도 28회보다는 준 24회(오전 오후 장소 구분)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23회(외교통일위는 미실시됨)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회와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금요일마다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고 마지막 주(10.25.)에는 목요일에 현장시찰을 하고, 금요일에는 자료를 정리를 하여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관광’ 위원회처럼 비쳐졌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속에 치루어지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경우에도 독립기념관 시찰후 하루 자료정리 시간을 가져 이틀동안 공백을 가졌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의 경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시찰예정이었던 10월 25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점검) 횟수비교》

위원회명 (2018년도 위원장)	2016년도 국정감사	2017년도 국정감사	2018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홍영표)	0	0	0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0	0	1
정무위원회(민병두)	1(감사중)	2	1
기획재정위원회(정성호)	2(감사중)	1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노웅래)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기술정보통신)	1	2	2
교육위원회(이찬열) (2016년도, 17년 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민석)			3
외교통일위원회(강석호)	1	0	1(0)
국방위원회(안규백)	5	7	6
행정안전위원회(인재근)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1(감사 중)	1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1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홍일표)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2	2
보건복지위원회(이명수)	2	3	1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2	1	1
국토교통위원회(박순자)	0	6(감사 중)	1
여성가족위원회(전혜숙)	1	1	1
정보위원회(이학재)	1	1	1
계	21	28	24(23)

※ 감사 중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끝난 후 시찰을 하는 경우로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함에도 이렇게 별건
대낮에 국정감사(이번 국토교통위의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음

3. 23시 이후 자정을 넘긴 심야국감은 11개 상임위원회 25회로

지난 해 8개위원회 16회 보다 크게 늘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우는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5회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각 4회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각 3회였으며,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도 자정을 넘겨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2017년도에도 심야 국정감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정부핵심임을 감안하여 2일로 나누어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고, 안보실 등 나머지 실처(室處)를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까지 진행된 경우는 10월 10일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8회였다.

심야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곳을 분석해 보면, 현지 피감기관에서 진행된 경우는 8회였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우는 17회였다.

심야 국정감사가 진행된 위원회 11개 중 여당위원이 위원장인 곳은 5곳(국회운영, 기획재정, 행정안전, 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이었고, 야당위원이 위원장인 곳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6곳이었다.

참고로 2017년도에 23시를 넘겨서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1회, 과방위 1회, 교문위 4회, 외교통일위 3회, 행정안전위 1회, 산업위 2회, 보건복지위 3회 등 16회였다.

《밤 11시를 넘겨 진행된 2018년도 국정감사 현황(일자별)》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피감기관 수	감사일자	감사개시	감사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과천청사	11	2018.10. 10.	10:06	00:16(익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정부서울청사	5	2018.10. 10.	10:03	23: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회	7	2018.10. 10.	10:09	23:26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회	7	2018.10. 11.	10:17	23:08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경찰청		2018.10. 11.	10:03	23: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2018.10. 11.	10:08	00:49(익일)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피감기관수	감사일자	감사개시	감사종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2018.10. 11.	10:02	23:2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세종청사	3	2018.10. 11.	10:00	23:23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2018.10. 15.	10:03	23:10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국회	3	2018.10. 15.	10:06	23:2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회	5	2018.10. 15.	10:01	23:04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회	5	2018.10. 16.	10:10	23:10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회	12	2018.10. 16.	10:11	23:1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2018.10. 18.	10:06	23:22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2018.10. 18.	21:33	00:17(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국회	2	2018.10. 19.	10:12	23:47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2018.10. 22.	10:07	00:05(익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국회	5	2018.10. 25.	10:02	23:50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국회	5	2018.10. 26.	10:14	00:29(익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2018.10. 29.	10:18	00:36(익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 및 동시수감기관	국회	6	2018.10. 29.	10:06	23:3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회	5	2018.10. 29.	10:02	23: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공공기관 전체	국회		2018.10. 29.	10:02	00:31(익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회	3	2018.10. 29.	10:06	23:55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2018.11. 06.	10:05	00:10(익일)

《2017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밤11시를 넘겨 진행한 경우)》

위원회 (횟수)	일자	피감기관	감사종료시간	비고
국회운영 (1)	2017-11-06	대통령비서실	23:24	조국수석 불출관련 정회
기획재정 (1)	2017-10-30	기획재정부	23:03	11시 2분 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	2017-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등 전체기관	25:19	

교육문화체육관광 (4)	2017-10-12	교육부	-	역사교과서 관련 파행후 자동 산회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24:40	전날 파행여진으로 지연시작
	2017-10-30	문화체육관광부 및문화재청 등	25:20	
	2017-10-31	교육부 등	24:00	
외교통일 (3)	2017-10-12	외교부	23:10	
	2017-10-30	외교부	23:56	
	2017-10-31	통일부	23:14	
행정안전 (1)	2017-10-13	경찰청	23:14	자료제출거부관련 파행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2)	2017-10-12	산업통상자원부	25:04	
	2017-10-31	산업통상자원부	23:45	
보건복지 (3)	2017-10-12	보건복지부	23:13	
	2017-10-17	식품의약품안전 처	23:50	생리대 등 안전성 문제
	2017-10-31	보건복지부	26:30	차수변경해 계속
8개위원회	16회			

4. 파행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치공방은 여전

위원장, 여·야당이 바뀌었지만 11년 연속파행 : 교육위원회

지난해 28회보다 대폭 줄어 12회로 줄어

제20대 국회 3차년도에서는 교육위(위원장 이찬열)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로 나누어졌으나, 교육위원회가 국감 첫날(교육위는 10.11부터 시작)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논란으로 일시 파행을 겪어 11년 연속 파행의 기록을 하였다. 다만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파행을 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 첫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당시 위원장 유성엽)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편향성과 여론조사 발표의 문제로 야간에 설전을 벌이다가 심야인 22시 30분경에 파행하였고, 다음날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0시 개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하여 오전 11시 30분에서야 개의를 하는 등 2차례 파행을 한 바 있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에는 9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일시 파행을 겪었고, 오후에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위원장 비서관의 취업 청탁의혹과 관련하여 파행을 하였으나 감사는 진행되었다.

10월 15일에도 국방위(위원장 안규백)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합참 비공개보고 유출과 관련하여 사과요구와 함께 일시 정회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도 심재철 의원의 제척논란을 두고 일시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시청 진입을 막은 이유로 파행하였다.

다만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소장권한 대행 문제로 파행하여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실시되었다.

조금 긴 파행으로는 10월 18일 과방위(위원장 노응래)의 방문진 국감시 김정수 경남도지사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저녁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에도 반쪽 국감이라도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올해에는 그런 보이콧은 없었고 국정감사도중 집단퇴장 사태만 상임위원회별로 있었다.

파행성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3회 등 모두 12회 정도였고, 파행성 정회를 하더라도 일시적 정회를 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국정감사모니터단에서 파악한 파행성 국감은 28개 국정감사에서 반쪽 국감이나 일부 파행성 정회 등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과방위 1개(KBS 등 국감,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와 법사위 1개(헌법재판소 국감)였다.

《모니터링 보고에 의한 2018년도 파행성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일자	피감기관	파행사유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10.10.수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답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	
교육위원회	10.11.목	교육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에 대한 문	

위원회	일자	피감기관	파행사유	결과
			제제기를 하며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파행	
법제사법위원회	10.12.금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발언을 두고 파행	
정무위원회	10.12.금	금융감독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 보좌관의 금융위원회 특채' 의혹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발언에 따른 파행	재 개 됐 지 만 또 다시 중지 후 재개반복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10.12 금	중 소 벤 처 기 업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의원들이 자리를 떠남	
정무위원회	10.15.월	공 정 거 래 위 원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 접촉 관련 질의를 공 정위 직원에게 한 후,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의 답변에 따른 반발에 의 한 위원장의 정회	
국방위원회	10.15.월	방위사업청	NLL(북방한계선)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에 대한 격돌에 따른 정회	
기획재정위원 회	10.16.화	한 국 재 정 정 보원	정보유출에 대한 맞고발 상태의 심 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제척 주장에 대한 갈등에 따른 파행	
법제사법 위원회	10.18.목	서 울 고 등 법 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침해 판결 담당 판사의 참고인 출석 여부의 공 방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체 퇴 장에 따른 파행	이상윤 판사출석문 제로 오전 의사진 행을 하였고, 중식 때문에 간신히 파 행을 면했으나 오 후 의사진행으로 15시 조금넘어 정 회후 4시경에 재개 됨
행정안전위원 회	10.18.목	서울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 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 여 항의 의사 표출을 위한 서울시청 진입 시도에 따른 파행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 회	10.18 금	방 송 문 화 진 흥원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과 관련해 경수 경남도지사 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지속적으 로 요구하였으나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해 문화방송(MBC) 국감을	파행 후 하루 만에 정상화

위원회	일자	피감기관	파행사유	결과
			앞두고 모두 퇴장	
행정안전위원회	10.25.목	경북지방경찰청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의혹에 대한 공방에 따른 정회	

《참고: 모니터 보고로 구성해본 2017년도 파행성 국정감사 일지》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10.12	외통위	외교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언어폭력'이라고 비난하자,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심야진행
10.12	교문위	교육부	2015년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촌극을 연출	위원장 국정감사 중지선언 이후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아 자동산회
10.13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라진 7시 30분 놓고 여야 격돌. 정회	2시간정도 파행 후 정상진행
10.13	행안위	경찰청	한국당,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녹취록 제출요구, 개혁위 소속 위원들이 편향되었다고 주장, 의사결정을 들여다봐야겠다고 강조. 이에 여당 반대로 50분간 정회	오후 2시 속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개혁위 관계자를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10.13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외	12일 몸싸움 관련 장외 공방전으로 인해 1시간 30분 국정감사 지연	정회 후 재개
10.13	법사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인준을 못받은 김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서면서 치열한 설전 끝에 결국 파행	오전10시부터 90분간 여야 양측의 공방 끝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 사회의,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헌재 국감 일정 종료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으로 인해 국감이 잠시 파행	노트북 덮개 덮으며 재개
10.17	법사위	법률구조공단 외	이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보고 7시간 행	30분간 정회 이후 11시 43분 속개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적조사'에 대한 반대입장 유지여부를 묻는 질문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정회	
10.19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	오후 국정감사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지연,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퇴 문제를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중지를 선언해 1시간 10분 가량 지연	오후 15시 33분 속개
10.23	농해수위	충청남도	자유한국당 측, 동성애 관련 질의, 설훈 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농해수위다. 동성애는 우리 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물론 국회 의원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충남도에 온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 강조. 이후 편파적 국감진행이라면서 공방, 파행	오후 2시 30분 속개
10.25	국토위	서울시	야당위원의 협박성 녹취록 폭로 관련 여당과 공방, 파행	1시간만에 재개
10.26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파행	10여분 파행 이후 재개, 반쪽국감
10.26	기재위	부산지방국세청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오후 1시 44분 정회
10.26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농해수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행안위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5시간 가량 정회	오후 5시13분 재개 반쪽국감
10.26	산자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오후 국정감사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6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관련 자유한국당 오전 국감 불참, 이후 이사선임 관련 여야간 입장차로 자유한국당 정회요구, 파행	오후 3시 종료
10.27	복지위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행안위	충남도경 및 충남지방경찰청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27	법사위	대검찰청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원인	결과
10.27	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 외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반쪽국감	예정대로 진행
10.30	교문위	문체부 등 종합감사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 파행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 재개
10.30	환노위	환경부, 기상청 등 대상 종합감사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 문구로 인한 논란, 공방 후 파행	20여분 정회 후 속개
10.31	과방위	방송통신위 등	신경민 의원의 고영주 이사장 태도 지적 후 막말, 자유한국당 국감보이콧 책임 묻다가 파행 야당의 지속된 ‘북한’ 관련 질의에 여당의 테클. 이후 말싸움으로 이어져 파행	30분정도씩 두 번 파행 후 정상속개
10.31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	자유한국당 피켓, 상복차림 철회요구 이후 공방, 파행	노트북 앞 문구, 상복차림 유지 합의, 국감속개
11.06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등	민정수석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한 논란, 파행	12시 재개

5. 실시간 인터넷 의사중계 늘어남(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도 공개)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해외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에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더 많이 공개되고, 실시간 방영되었다.(다만 서울고법, 고검 등은 녹화중계도 안함)

개별의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통해 알리는 것도 매우 신선하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에도 부합.

6. 외교통일위원회의 해외국감 비효율 여전

141시간 비행기 타며, 52시간 국정감사 12시간 30분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국정감사(주영국대사관)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018년도 3개 반을 나누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10.12.부터 10. 23.까지 12일 동안 22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구주반(감사반장 이수혁)은 10.14. 주영국대사관부터 10.23. 주러시아대사관까지 6일동안 총 11시간 55분 국정감사를 하였다.

6일 동안의 비행시간을 계산해 보면 38시간 40분이다. 38시간 40분을 비행하면서 찾아가 11시간 55분 국정감사를 한 것이다.

《구주반(감사반장 이수혁 등 감사위원 6명)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자	대상기관	출석의원수	감사기간
2018.10. 14.	주영국대사관	5	2:04
2018.10. 17.	주튀니지대사관	6	1:55
2018.10. 18.	주포르투갈대사관	6	1:57
2018.10. 20.	주독일대사관	6	2:19
2018.10. 21.	주그리스대사관	6	1:41
2018.10. 23.	주러시아대사관	6	1:59
		총감사시간	11:55

미주반(감사반장 강석호)은 10. 12. 주 미국대사관부터 10. 20. 주 코스타리카대사관 등 2개기관까지 7회 총 18시간 58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미주반의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서 감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항공기 비행시간을 추정해 보면, 6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는 추정된다. 62시간정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18시간 52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미주반의 활동에 대해 보도된 경우는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남북 간 협력사업의 속도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이른바 '동맹론'과 '자주론' 격돌에 이은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진 것이었다. (연합뉴스 2018. 10. 17. 자)

《미주반(감사반장 강석호 등 감사위원 8명)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자	대상기관	출석의원수	감사기간
2018.10. 12.	주미국대사관	8	4:35
2018.10. 15.	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8	2:28
2018.10. 16.	주UN대표부	8	2:45
2018.10. 16.	주뉴욕총영사관	8	2:02
2018.10. 17.	주아르헨티나대사관	8	2:39
2018.10. 19.	주우루과이대사관	7	2:00
2018.10. 20.	주코스타리카대사관 등 2개	7	2:29
		총감사시간	18:58

아주반(감사반장 정양석)은 10.13.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2개 기관부터 10. 23.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까지 총 5일 동안 14시간 52분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아주반의 일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오는 비행시간 40시간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까지 7시간 10분정도 걸리고, 주 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6시간 10분이 걸린다.

《아주반(감사반장 정양석 등 감사위원 8명)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자	대상기관	출석의원수	감사기간
2018.10. 13.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아세안대표부	5	2:43
2018.10. 16.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6	2:47
2018.10. 18.	주일본대사관	8	3:55
2018.10. 22.	주중국대사관	7	3:10
2018.10. 23.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6	2:17
		총감사시간	14:52

《참고 해외공관 국정감사(최초 계획서 기준)를 위한 최소 비행시간 추정》

직항로를 기준으로 하고, 없을 때에는 경유지를 통해 가장 빠른 노선 기준

재외공관	비행 시간	재외공관	비행 시간	재외공관	비행 시간
인천-주미국대사관 (워싱턴)	13:50	인천-주인도네시아 대사관(Jakarta)	7:10	인천-주영국대사관 (런던)	12:30
주미국대사관(워싱턴)- 주캐나다대사관(Ottawa)	1:30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Sydney)	7:10	주영국대사관-주튀니지 대사관(튀니스 카르타고 공항)	2:50
주캐나다대사관- 주뉴욕대표부(New York)	1:30	주시드니영사관- 주일본대사관(동경)	9:25	주튀니지 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Lisboa)	4:55 (경유 1회)
주뉴욕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Buenos Aires)	10:40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Beijing)	3:45	주포르투갈대사관 - 주독일대사관(Berlin)	3:30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Montevideo)	0:45	주중국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Tashkent)	6:20	주독일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Athens)	2:45
주우루과이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San Jose)	10:00 (경유 1회)	주우즈베키스탄 대 사관-한국인천	6:10	주그리스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3:40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한국 인천공항	24:00 (경유 1회)			주러시아대사관 (Moscow)-인천공항	8:30
비행시간계	62시간 15분	비행시간계	38시간 40분	비행시간계	40시간

VI. 제20대국회 제3차년도(2018년도)국정감사 전반(全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재정 그리고 조세 분야 등 핵심적인 정부 정책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의 2018. 10. 10. 국세청 등 국감 개의발언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실 질책과 제안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은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또한 정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정부에는 값진 성찰의, 위원님들께는 보람찬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2018. 10. 10. 국정감사 총리 모두 인사말 중

1. 2018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조정 등

2018년 8월 30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²⁾이 의결되었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에 의해 2018. 10. 10.부터 10. 29.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실시하기로 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6일과 7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10월 30일 감사와 31일 현장시찰을하기로 하였다.

2. 상임위원회 분할 및 명칭 변경

2018년 7월 16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이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되고, 당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위원회안)」이 가결(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없고, 송언석 의원 기권)되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종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어 변경되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3.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8선인 최다선 서청원 외교통위원회 위원 등 298명이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시 국무위원이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귀하는 대신 국무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국무위원인 국회의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구속재판 중인 **이우현** 의원, **최경환** 의원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도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은 시찰 제외 10일 불참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10일과 겸임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 1일 불참하였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로 생긴 **교육위원회**가 15명(정원은 16명이나 **노회찬** 의원 사망후 결원으로 1명 줄었음)으로 가장 적었다. 후반기 원구성이 40여일 지연되었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 7. 26. 위원장이 선출되었다.(다른 위원회는 10일전인 7월 16일 선출됨)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129명으로 43.3%, 자유한국당 112명으로 37.6%였고, 바른미래당 30명으로 10.1%, 비교섭단체는 27명으로 9.0%였다.

《2018년도 국정감사시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현황》

2018년 10월 10일 기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
더불어민주당	129	43.29%	자유한국당	112	37.58%
바른미래당	30	10.07%	비교섭	27	9.06%
			계	298	100%

4. 2018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2018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18년 10월 1일 제36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방위원회와 9월 30일 7개(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 기관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전체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53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81개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0개였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28개 기관을 선정한 기획재정위원회였고, 그 다음 국토교통위원회로 29개 기관이었다(검임위 제외).

5. 58회나 5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국감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도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피감기관이 참석하는 종합감사를 제외하고도 전체 일정 중 무려 58회(지난해 44회로 14회 증가)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렇게 5개 기관이상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은 피감기관이 576개로 전체 피감기관 748개(정보위 제외함) 중 77%에 달했다.

국방위의 경우에는 하루에 32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체 일정 중 20개 이상 감사를 한 경우도 6일이나 되어 중요 피감기관이 아닌 개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2018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6	2018.10. 10.	10:07	22:3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	2018.10. 10.	10:06	00:16 (익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5	2018.10. 10.	10:03	23:31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32	2018.10. 10.	10:33	21:0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12	2018.10. 10.	10:04	19:3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	2018.10. 10.	10:09	23:26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7	2018.10. 11.	10:17	23:0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24	2018.10. 11.	10:02	18:4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5	2018.10. 12.	10:11	22:41
교육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 등	12	2018.10. 12.	10:07	19:1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	2018.10. 12.	10:05	19:01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7	2018.10. 12.	10:05	21:09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	2018.10. 15.	10:03	18:57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등	9	2018.10. 15.	10:01	18:03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13	2018.10. 15.	10:08	22:04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5	2018.10. 15.	10:01	23:04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등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등	16	2018.10. 15.	10:00	18:30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등	9	2018.10. 16.	10:08	13:01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검찰청 등	6	2018.10. 16.	14:31	18:3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	2018.10. 16.	10:05	20:05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5	2018.10. 16.	10:10	23:10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	2018.10. 16.	10:11	23: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19	2018.10. 16.	10:02	17:5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6	2018.10. 16.	10:01	18: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8	2018.10. 16.	10:07	22:02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	2018.10. 16.	10:00	18:54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6	2018.10. 17.	10:04	18:36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14	2018.10. 18.	10:06	22:20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 회등	23	2018.10. 18.	10:02	19:24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등	10	2018.10. 18.	10:02	16: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	2018.10. 18.	10:07	18: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5	2018.10. 18.	10:02	1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9	2018.10. 18.	10:08	22:56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등	12	2018.10. 18.	10:00	18:5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6	2018.10. 18.	10:04	21:09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018.10. 19.	10:10	21:38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8	2018.10. 19.	10:04	17:54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등	7	2018.10. 19.	10:10	12:53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등	5	2018.10. 19.	14:23	17:29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	2018.10. 19.	10:02	18: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	2018.10. 22.	10:06	21: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5	2018.10. 22.	10:02	18:5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등	11	2018.10. 22.	10:06	22:42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10	2018.10. 22.	10:03	20:03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10	2018.10. 23.	10:16	13:18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	7	2018.10. 23.	14:59	18:09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일시	감사시작 시간	감사종료 시간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등	5	2018.10. 23.	15:15	17:28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7	2018.10. 23.	10:06	18:5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26	2018.10. 23.	10:01	19:02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대한체육회 등	5	2018.10. 23.	10:00	18:4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	2018.10. 23.	10:03	19:47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6	2018.10. 23	10:01	17:5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8	2018.10. 24.	10:11	20:18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등	20	2018.10. 25.	10:03	19:0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등	8	2018.10. 25.	10:03	19:1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7	2018.10. 25.	10:00	20:59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6	2018.10. 30.	10:04	19:11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5	2018.11. 07.	10:08	18:30

6.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감사시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10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14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을 비롯해 평일 새벽시간대에 중계방송을 하였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검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무려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 협조 마감일인 11. 14. 현재 153개 영상회의록이 올라와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 질의시간 및 질의횟수 등 통계가 이루어짐»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2018. 10. 18.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시경에서 촬영

을 하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촬영의 목적에 대해서 국회의 요청을 받고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위원회 행정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는 소동까지 있었으나, 영상회의록을 올리기 위해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이 신속히 공개되어 해외국감까지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영상회의록과 달리 속기록인 회의록이 너무 늦게 올라와 2018. 12. 7. 현재에도 전체 국정감사(시찰 제외) 53.9% 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2018년도 영상회의록 및 회의록 국회홈페이지 등재현황》

2018. 12. 7. 10:00 현재

위원회	위원장	국감진행횟수	영상회의록	비율	회의록	비율	위원수 (현원/정원)
국회운영	홍영표(민)	3	3	100.0%	3	100.0%	28/28
법제사법	여상규(한)	14	14	100.0%	7	50.0%	18/18
정무	민병두(민)	10	10	100.0%	6	60.0%	24/24
기획재정	정성호(민)	13	13	100.0%	6	46.2%	26/26
교육	이찬열(미)	8	8	100.0%	8	100.0%	15/1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노웅래(민)	10	10	100.0%	8	80.0%	21/21
외교통일	강석호(한)	22	17	77.3%	3	13.6%	22/22
국방	안규백(민)	9	7	77.8%	7	77.8%	17/17
행정안전	인재근(민)	25	25	100.0%	9	36.0%	22/22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7	7	100.0%	5	71.4%	17/1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황주홍(평)	12	12	100.0%	9	75.0%	19/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홍일표(한)	10	10	100.0%	5	50.0%	29/29
보건복지	이명수(한)	10	10	100.0%	6	60.0%	22/22
환경노동	김학용(한)	10	10	100.0%	5	50.0%	16/16
국토교통	박순자(한)	10	10	100.0%	8	80.0%	30/30

위원회	위원장	국감진 행횟수	영상 회의록	비율	회의록	비율	위원수 (현원/정원)
정 보	이학재(미)	4	0	0.0%	0	0.0%	11/12
여 성 가 족	전혜숙(민)	1	1	100.0%	1	100.0%	17/17
	계	178	167	93.8%	96	53.9%	

7. 2018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2018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은 1447시간 44분이었다.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으므로 약 144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2016년도 1216시간 43분보다도 많았다.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이라 조금 절의시간이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파행은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소요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	위원회	감사시간
법제사법	117: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0:50
정무	99:5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4:14
기획재정	1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24:03
교육	83:50	보건복지	106: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2:20	환경노동	100:13
외교통일	93:31	국토교통	102:02
국방	61:42	여성가족	9:07
행정안전	137:48	국회운영	22:27
		계	1447:44

8. 2018년(20-3)국정감사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국정감사자료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전체 감사위원의 52.66%

교육위원회의 경우 73.33%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문화체육관광은 17.65%로 낮아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중에 안내된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등 포함)에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질의자료, 동영상, 사진 등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자료)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회의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298명중 157명으로 감사위원 중 52.65%의 감사위원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조사 중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이 안된 경우는 국정감사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지난해와 달리 조사방식에 있어서 보도된 언론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보다 감사위원들의 홈페이지 국정감사 공개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20대 국회 3차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현황》

위원회	위원명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 수	홈페이지 소개 의원비율 (%)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 료게시한 의원 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
법제사법	18	15	83.33	10	55.56
정무	24	23	95.83	14	58.33
기획재정	26	22	84.62	17	65.38
교육	15	12	80	11	73.33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	21	17	80.95	13	61.9
외교통일	22	21	95.45	10	45.45
국방	17	15	88.24	7	41.18
행정안전	22	17	77.27	12	54.55
문화체육관광	17	15	88.24	3	17.65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	19	13	68.42	9	47.3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9	19	65.52	14	48.28
보건복지	22	19	86.36	13	59.1
환경노동	16	13	81.25	10	62.5
국토교통	30	22	73.33	14	46.67
계	298	243	82.06	157	52.66

참고로, 2018년 11월 14일까지 2018년도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NGO모니터단 (www.goodlaw.org)에 보도자료를 공개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의 자료건수는 3,895건이었다

9.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장의 말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2018년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있었던 촌철살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조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10.10	기재위	국세청	유승희	남(男)세청으로 불러야겠다.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세청 간부진을 보며 여성간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냐며 비판하면서
10.10	기재위	국세청	나경원	바른생활 어린이처럼 답변하시는 데요	재량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심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을 비판하며
10.10	문체위	문체부	손혜원	아시안게임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야구대표팀의 선수 선발 과정을 비판하던 중
10.10	농축산위	농식품부	정운천	국회의원이 기업에 갑질한다는데, 이게 갑질이라 한다면 (기꺼이 갑질)하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5대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질책하면서 한 말
10.10	농축산위	농식품부	김정재	갑질이 아니라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파악한 거 같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꺼리는 5대 대기업의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언론 매체의 지적이 없었다면서 꺼낸 말
10.11	기재위	관세청	박영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이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10.11	교육위	교육부	박용진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고발하며 폭로
10.11	외교위	통일부	이정현	지도층 세력에 반평화	5.24 조치를 해지하면 안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반통일 세력이라니	된다고 주장할 경우 반통일 반평화 세력으로 몰린다고 발끈하면서
10.11	외교위	통일부	유기준	100도 비등점에 달한 물을 요구	외부에서 볼 때 사찰 허용하고 폐기까지 일련의 스케줄이 나와야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지 물을 끓는 과정을 계속 설명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적하며
10.16	국토위	충북도	이현재	유감스럽다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면서
10.19	기재위	기재부	심상정	종부세에 콤플렉스 있으세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종부세 콤플렉스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10.19	국방위	해군본부	하태경	장군님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 있다는 경고통신을 하라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인정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하던 중 발언
10.22	법사위	감사원	박지원	지금까지 감사원이 해온 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4차례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하면서
10.22	법사위	감사원	장제원	감사원을 보고 있으면 김수희 선생의 ‘애모’가 생각나요. 왜 그렇게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10.22	과방위	과기연 등	최연혜	커피믹스인가..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비판하면서
10.23	기재위	대구지방국세청 등	유승희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일용직과 가사도우미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
10.23	행안위	충북도	유민봉	제천에 가서 참 양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만난 소감을 밝히면서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화자	말	배경/이유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나경원	통계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비판하며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추경호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10.25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심상정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안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한 발언
10.25	농축산위	수협중앙회 등	박원주	스스로 능력없다고 하는 기관은 처음봤네	“능력이 부족해 종자방류 인증제도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비판하며
10.25	농축산위	수협중앙회 등	정운천	여기보면 풍력발전회사 같아요	수협중앙회 누리집 배경화면이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풍력발전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0.26	농축산위	종합국정감사	정운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고 수협은 경제사업을 모두 적자로 끌어가면서 어업인들은 뒷전이고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싸우기만 한다.	종합국감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며
10.29	외통위	통일부	정진석	리선권 위원장이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소위 ‘목구멍’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10.29	교육위	종합국정감사	박용진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니 한유총의 ‘유’는 어린인가 아니라 기름 유(油)같다.	한유총에 대한 비리자료를 보고 국민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데, 한유총은 정작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을 비꼬며
11.06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등	임종석 (비서실장)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답하며

《2017년도 감사위원의 한마디 말씀》

(언론보도내용 조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10.12	국방위	국방부 등	김학용	야구팀이 10명인데 방망이, 글러브 4년 후에 주겠다는 것, 어떻게 필수 전력 확보할거냐	부대개편의 사업의 핵심장비 등 필수 전력화 사업 46개 중 40개가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0.12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섭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하라면 애기가 되느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는 마당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10.12	외통위	외교부 등	박주선	미국과의 외교는 외화내빈,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는 설상가상. 일본과의 외교는 기대무산.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는 유명무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4강외교 성과를 폄평하며
10.13	국방위	방 위 사 업 청 등	이철희	장관의 직접 지시로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합참이 소요 결정을 한다. 기록적 시간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도입한 주한미군의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졸속 구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10.16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등	김학용	참수부대가 참수시키려 갔다가 참수당할 우려가 많다	참수작전 핵심부대인 특전사 총 64개 팀 가운데 50여개 팀의 통신 상태가 먹통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이진복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이 직원 수와 점포 수 줄이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성원	너무 한쪽만 제기되면 의혹이 사실처럼 된다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지적을 쏟아내자
10.16	정무위	금융위원회	김종석	이 사람이 개인 재산 7000만원을 날릴만큼 잘못했나? 이 사람 장가가려는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규제' 부작용 사례로써 투기지역 지정으로 위약금 7000만원을 물게 된 30대 시민의 사례를 들면서
10.16	법사위	법무부	노희찬	제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법무부 국감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기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10.16	법사위	법무부	박지원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으로 나와가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안이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10.17	행안위	서울특별시	장제원	정신이 나갔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강탈”했다고 비판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종석	금융감독원의 영문명이 F S S (F i n a n c i a 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서비스’다. 규제청이 아니라	감독행정의 목적은 피감독자의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지 피감독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김해영	지금 거기 앉아계시는 부원장 이하 분들은 전부 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계속되는 취업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사규정 개정엔 나서지 않은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정재호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사회다	사회에 갓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미리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0.18	환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한정애	(피해자가)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가해자가) 너 라고 얘기했다	성희롱 사건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성희롱 사건 질타
10.19	행안위	경기도	백재현	경기도 국감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하루 종일 질의에서 남 지사의 청년정책과 이 시장의 청년 배당정책이 비교 거론되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예 이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와 은행장으로 있는 주빌리 은행 관련 질의를 하자
10.20	농해수위	농협	이만희	무엇이 농민을 위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농민들의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학용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육군 2작전사의 장비가 전방1·3군에서 수명이 다한 물자를 전환배치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 위원	말	배경/이유
					며
10.23	국방위	육군 제2작전 사령부	김중로	공관과 관사가 크고 궁 궐같이 지어진 것은 독 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에게 대지 8200평·건평 160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 관의 효율적 이용을 촉구하 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박지원	반려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순 없는 노릇 아 닙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지만 주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정성호	기업이 100마일로 움직 이면 법은 1마일로 움직 인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에게 미 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의 말을 인용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박지원	오동잎이 떨어졌으면 가 을이 온 것을 알 듯 우 병우가 떨어지면 노승권 지검장도 떨어져야 한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의 우병 우 사단 의혹에 대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지적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정성호	법원이 제일 못하고 있 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한 영장 기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 하며
10.24	법사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고등 검찰청 등	노희찬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경우가 많은 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 미에서 질의하겠다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 온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 호 부산가정법원 판사에게 감사하다며
10.26	농해수 위	수협	이양수	어업인을 위한 은행이 냐, 일반인·기업인을 위 한 은행이냐	수협은행장에게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 하라고 주문하며
10.30	환노위	환경부, 기상청	강병원	전어 냄새를 맡으신 것 도 아닐 텐데 자유한국 당 의원님들께서 복귀해 주셨다	국감 보이콧 철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으로 복귀한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10.31	국방위	국방부 등 중 합감사	김중로	국민이 불안해 하니 문 정인 특보와 술 한잔 하 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통 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간에 자꾸 엇박자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스는 누구겁니까?’가 회자되어 유행어가 됨

10.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3개위원회 15회 실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경기도 - 이재명 개인의혹사건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평창올림픽 준비 때문에 하지 않았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에 대해서는 2개 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평창올림픽 개최 후 경기장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하트 이슈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서울시 교통공사 세습고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집중감사를 받았으며, 서울시 주택정책 및 인사정책에 대한 난맥상이 점검되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시에 방문하여 서울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하는 초유사태도 빚어졌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후에는 임청각에 대한 시찰이 있었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후에는 청주공항과 오송역 간 진입도로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었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에 대한 국정감사는 1회였으나, 국방위에서는 해군기지 (10.11)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단지 관련 시찰 (10.25.)을 하였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사 관련 의혹사건이 수사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의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과 도지사의 연관문제 때문에 이슈화되었다.

광주시(시장 이용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 첫 국정감사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나 민원이 많이 거론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여권성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지방권력 교체를 실감케 하였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일자별)》

위원회	감사반	피감기관	단체장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출석의원수	특이사항(이슈)
국토교통	지방1반	경상북도	이철우	10.16.	10:02	14:53	15	신규 원전

위원회	감사반	피감기관	단체장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출석의원수	특이사항(이슈)
								백지화, 도청 신도시 재개발재검토
국토교통	지방2반	충청북도	이시중	10.16.	10:00	13:14	15	KTX 세종역신설논 란
행정안전	전체	서울시	박원순	10.18.	10:06	21:06	22	채용비리
행정안전	전체	경기도	이재명	10.19.	10:04	17:33	22	도지사 개인사문제
행정안전	지방1반	강원도	최문순	10.22.	10:04	15:09	11	올림픽 후속대책
행정안전	지방2반	세종시	이춘희	10.22	10:01	12:13	11	재난대책
행정안전	지방2반	대전시	허태정	10.22	14:01	16:14	11	청년일자리
국토교통	전체	서울시	박원순	10.22.	10:07	00:05 (익일)	30	교통공사채용 비리
행정안전	지방1반	경상남도	김경수	10.23.	10:09	15:43	10	드루킹 사건
행정안전	지방2반	충청북도	이시중	10.23.	10:16	13:21	11	강호축 등 현 안, 제천화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전체	강원도	최문순	10.23.	10:03	15:34	17	산림회복
행정안전	지방1반	경상북도	이철우	10.25.	10:44	15:45	10	탈원전대책 등
행정안전	지방2반	광주시	이용섭	10.25.	10:23	14:34	11	감사중 방청 남성이 쓰러짐
행정안전	지방1반	울산시	송철호	10.26.	9:58	14:58	9	주력산업, 경제살리기
행정안전	지방2반	제주도	원희룡	10.26.	10:02	12:54	11	제주 제2공항

11. 2018년(20-3)국정감사의 쟁점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국정감사의 주요쟁점》

(모니터보고/ 언론보도/ 위원장 정리 등 기준)

위원회	국감 키워드, 쟁점, 이슈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중심)의 난맥상 △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도입 방식 등	
법제사법위	△ 사법농단 수사 방해 여부 △ 일본기업 배상판결 △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 △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 법원개혁방안 △ SAT기출문제 저작권 재판의 난맥상 △ 주요 이슈 관련 재판 및 수사 관련 미비점 등	대법원장 증 인신문 파행, 대통령의 강 정마을 관련 발언 파행, 판 사 출석여부 파행

위원회	국감 키워드, 쟁점, 이슈	비고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 문제	
정무위원회	△ 가짜 독립유공자문제 △ 저상장과 금융문제 △ 소비자보호 대책 □ 공정거래위 내부분제 □ 김영란법 관련	위원장 측근 낙하산 인사 의혹 논란
기획재정위원회	△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대책 △ 현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과 고용 복지의 강화, △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 주류 종량제 문제 □ 증권 거래세 문제 등	한국 재정 정 보원 정보유 출관련 감사 위원 제척 논란
교육위원회	□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 공개 □ 숙명여고 사태 등 관련 학사부정 □ 전교조 문제와 교육현장의 이념문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KBS와 MBC방송의 공정성 문제 □ 글로벌 외국 IT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기부의 역할 미흡, □ 가짜뉴스 대책 □ 드루킹 관련한 증인 불출석	가짜뉴스 현 수막 관련 파행
외교통일위원회	□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비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과다 지출 논란 □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불허 □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경협의 적절성 문제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적절성 문제 □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책 모색	
국방위원회	□ 남북 간에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안보공백 대책 □ 국방개혁 2.0 추진 관련 □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 구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관련 □ 북한의 비대칭 전력 우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 □ 군 보안 문제 인터넷 유출 □ 북한의 EMP탄에 대한 방어대책과 시설보강, □ 무기체계 획득 절차문제 □ 방산수출	비공개 문건 공개 관련 파행
행정안전위원회	□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무원 증원 논란 □ 세습고용 문제 □ 수사권 조정 등 개혁문제 □ 고양 저유소 화재 대처 부실 등 현안에 관한 문제점 □ 소방 공무원 처우개선	김성태 자유 한국당의 시 청 방 문 관련 파행

위원회	국감 키워드, 쟁점, 이슈	비고
	☐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시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예술인 임금 체불 및 불공정 계약 대책 ☐ 대한체육회의 보은인사논란과 부실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 ☐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행성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 ☐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존폐 논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 목표가격 산정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 가축전염병 방역제도 개선 ☐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 해양수산 R&D 성과 미진 등에 대한 지적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근절 ☐ 현대상선의 선박발주 과정상의 문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 △ 정부의 탈원전 정책 ☐ △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명단 자료 공방 ☐ 내수침체와 일자리 감소 ☐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란 ☐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안 ☐ 한미 FTA 개정협상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계에 잘 안착할 수 있고 기술 유출을 효율적으로 방지노력 ☐ 최저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차등화 ☐ 주 52시간 근로시간 대책 (유예기간 필요성)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비리 ☐ 부정확한 진단검사에 대한 건보재정 손실 과다 문제 ☐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발사르탄 등 발암물질을 사용한 의약품과 유럽에서 촉발된 E형 간염 발사르탄 사태의 미흡한 후속조치 지적 ☐ 초코 케이크의 집단 식중독 사건 ☐ 식품 및 의약품의 해외 직구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최근 소비 경향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방안 ☐ 부적절한 제품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 국민연금기금 개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이 큰 줄기의 보건복지 정책 ☐ 라돈 생리대·결핵이나 감염병 예방대책 ☐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환경노동위원회	☐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의 과도한 불용 문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 문제 ☐ 옥시 부당해고와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	

위원회	국감 키워드, 쟁점, 이슈	비고
	☐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대책 ☐ 취업준비생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NCS 채용방식의 문제 ☐ 남북 간 환경 협력 ☐ 물관리 일원화 ☐ 제품 인증부터 취소까지 친환경인증제도 문제 ☐ 온실가스 감축대책 ☐ 수도요금 편차 문제, 댐관리 일원화 ☐ 기상오보	
국토교통위원회	☐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 ☐ 철도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 ☐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보완책 ☐ 아파트값 폭등관련 대책 ☐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문제 ☐ 드론성능인증기준 마련 필요성 ☐ 건설 현장 안전성 필요성 ☐ 공항 내진 설계 지진대책 미흡문제 ☐ KTX 승무원의 간접고용, BMW자동차 결함사태	서울시 국감 중 야당 원 내대표 방문 파행
여성가족위원회	☐ 각종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 ☐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현 장 시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 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시찰 횟수	국회 사용 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평균 감사위 원원 출석률
국회운영	홍영표(민)	28	8	2	22:27	0	2	3	98.21%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3	12	117:42	1	2	14	94.84%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99:53	2	7	10	95.00%
기획재정	정성호(민)	26	28	11	111:27	1	5	13	99.23%
교육	이찬열(미)	15	63	9	83:50	1	7	8	88.24%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노웅래(민)	21	80	12	112:20	1	9	10	83.33%
외교통일	강석호(한)	22	30	17	93:31	1(0)	3	17	98.86%
국방	안규백(민)	17	66	12	61:42	6	3	7	81.48%
행정안전	인재근(민)	22	37	11	137:48	0	3	25	96.73%
문화체육 관광	안민석(민)	17	81	10	60:50	3	7	7	84.03%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황주홍(평)	19	36	12	104:14	0	10	12	89.47%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홍일표(한)	29	61	12	124:03	3	10	10	100.0%
보건복지	이명수(한)	22	37	11	106:35	1	8	10	95.45%
환경노동	김학용(한)	16	68	11	100:13	0	8	10	91.25%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29	10	102:02	3	3	10	98.89%
여성가족	전혜숙(민)	17	6	2	9:07	1	1	1	94.12%
계		298 (343)	748	165 (161)	1447:44	24 (23)	88	167	93.0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9명 중 국회의장 문희상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과 시간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 (해외시찰 1회 계획하였으나 무산됨)
4.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음
5.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8년 12월 7일 기준임)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2017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 일수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	평균 감사위원 출석률
법제사법 (권성동)	17	72	12	92:11	2	5	95.0%
정무 (이진복)	24	44	12	102:48	8	9	92.4%
기획재정 (조경태)	26	28	11	97:13	6	10	91.3%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신상진)	24	80	12	97:49	9	12	87.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22	11	116:18	6	17	95.6%
외교통일 (심재권)	22	28	15	91:10	4	4	97.7%
국방 (김영우)	17	63	13	50:51	2	5	93.4%
행정안전 (유재중)	21	32	12	105:14	3	13	90.5%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설훈)	19	34	12	114:42	8	9	87.7%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장병완)	30	59	12	113:52	10	10	98.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	12	103:49	8	9	92.4%
환경노동 (홍영표)	16	60	11	92:34	5	8	90.0%
국토교통 (조정식)	31	28	11	98:34	3	6	96.8%
국회운영 (정우택)	28	8	2	21:12	2	2	98.2%
여성가족 (남인순)	17	6	2	9:18	1	1	100.0%
계	343	696	160	1307시간 35분	77	120	93.7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9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과 시간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
4.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고, 과방위와 교문위는 각 1일 추가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하였음.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7년 12월 1일 기준임)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참고 20대 국회 1차년도(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2015)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2015)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2015)	의원 출석률 전체/정상화이후만 (2015)
법제사법 (권성동)	17	72(72)	12(12)	101:49 (119:04)	2(2)	5(6)	90.2%/96.8% (100%)
정 무 (이진복)	24	44(44)	11(13)	104:28 (102:29)	9(6)	9(8)	99.6% (94.6%)
기획재정 (조경태)	26	28(28)	12(12)	88:45 (119:24)	8(6)	9(8)	99.6% (92.9%)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 신 (신상진)	24	78(77)	12(11)	80:30 (97:14)	8(8)	10(11)	94.2%/97.7% (86.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16(118)	12(12)	153:30 (143:21)	11(8)	11(10)	78.7%/97.0% (97.5%)
외교통일 (심재권)	22	41(30)	14(15)	43:56 (67:57)	4(3)	4(3)	76.1%/100% (85.87%)
국 방 (김영우)	17	53(52)	13(12)	50:53 (68:54)	5(4)	5(6)	83.7%/90.8% (94.8%)
안전행정 (유재중)	22	31(34)	12(12)	72:42 (106:59)	5(5)	6(13)	100.0% (95.2%)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김영춘)	19	35(42)	14(13)	101:47 (116:56)	5(5)	6(11)	83.3%/99.3% (98.1%)
산업통상 자원 (장병완)	30	56(55)	12(12)	103:21 (105:22)	8(7)	8(8)	86.7%/100% (94.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32)	12(11)	112:27 (107:28)	6(7)	8(9)	84.1%/97.7% (93.3%)
환경노동 (홍영표)	16	58(59)	11(12)	97:51 (96:05)	5(7)	7(9)	86.1%/100% (87.5%)
국토교통 (조정식)	31	29(36)	11(11)	104:44 (101:28)	4(2)	5(5)	83.0%/99.1% (95.3%)
계	299 (297)명	687 (694)개	158 (158)일	1216시간43분 (1352:41)	80 (73)일	97(107)개	88.10%/98.28% (93.7%)

-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하면 감사시간은 37시간 36분(지난해 20시간 35분)이 더 증가함.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함)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6년 10월 25일 기준임, 참고로 지난해는 2015년 11월 8일 기준임)

< 결임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지나해)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영상 회의록	감사위원 출석률 (지나해)
국회운영 (정진석)	28	8(8)	2	21:42 (20:02)	2	3(3)	100% (96.4%)
여성가족 (남인순)	16	6(6)	1	15:54 (11:35)	1	1(1)	100% (100%)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 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